



아랍 혁명
**시리아 혁명과
서방 개입 반대**
▶ 8 ~ 9 면

한미FTA
폐기만이 대안이다
▶ 4 면

KTX 민영화
**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 7 면

중국
**지배자들의 내분과
저항의 성장**
▶ 11 면

여성 비정규직
**건설되는
3·8 공동 투쟁**
▶ 14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이피디 이송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08

Left21.com

제75호 | 2012년 2월 18일 ~ 3월 2일 | 값 1,800원

레프트21

돈 봉투와 디도스 쌍용차 연쇄살인 한미FTA와 KTX 민영화 등록금 쥐꼬리 인하

몸통은 이렇이다

박근혜의 '쇄신'이 사기극이었고, 새누리당의 본색이 "완전 극우"(강금실)라는 게 거듭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9일 야당 추천 묶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용환 후보 인준을 부결시켰다.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천안함도 '북한의 공격이 맞다'는 사람인데도 '정부 발표를 확신'하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또 박근혜는 "이번 총선이 FTA 폐기를 막을] 구국의 결단이 돼야 한다"며 독려하기 시작했다. '1퍼센트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자신들의 핵심 기동으로 삼고 나선 것이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쇄신을 너무 믿었다"고 탄탄한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나 '보수 삭제'니 하는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은 처음부터 집권당 붕괴 위기를 수습하려는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 정권재창출은 이

명박과 박근혜 공동의 목표다.

물론 박근혜는 표를 얻으려면 이명박과 단절한 모양새를 내야 했다. 박근혜 비대위가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스스로 물러나 달라'고 애원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정강·정책과 당명을 바꾸면서 '좌클릭' 시늉도 했다. 우익 변호사 전원책은 이런 박근혜에게 "이제 보수의 적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잠깐의 사기극 이후 박근혜 비대위는 조용환 부결과 한미FTA 공세를 통해 친이계를 포함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부패하고 퇴행적인 우파인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와 합당을 했고, 이제는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종선 연대를 논의하려 한다. 한미FTA 전도사 김종훈을 영입 1순위로 올려 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용산참사 살인주범인 김석

기, 농민 시위 살인진압과 철도노조 탄압 주범인 허준영도 버젓이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나섰다.

이것은 전통적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최근 이명박의 반동 시도와도 연결돼 있다.

이명박은 2월 6일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공개 독려했다. 국가보안법 등 공안 탄압도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 좌파 활동가 등을 속죄양 삼아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이런 시도는 마치 1990년 10월 노태우가 '범피와 의 전쟁'을 선포하며 권위주의의 공간 통치를 다시 강화하려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기층의 불만과 분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듬해 '5월 투쟁'의 역풍을 맞고 오히려 공간 통치를 주도하던 내각이 붕괴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통합당은 박근혜와 이명박의 반격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힘들다. 당장 '여당일 때는 한미FTA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박근혜의 공격에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진보진영만이 FTA 등을 놓고 우파에 맞서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자격도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주도 속에 부패, 빈부 격차, 노동 탄압에 대한 분노가 이명박 정부에 대항한 총체적 항의로 발전하도록 투쟁을 건설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야권연대로 이런 진보진영의 주도성과 대중투쟁 건설에 종속돼야지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99퍼센트의 요구를 쟁취하는 길이고,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

▶ 4면으로 이어짐

그리스 민중에게 배우자

» 관련기사 3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은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누구의말알까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저도 공천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해요.”
‘박근혜에 불만 없냐’는 질문을 받은 정몽준

“어쨌든 트위터 상에서 새누리당이 훨씬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

쏟아지는 욕과 조롱을 받기는 새누리당 대변인 황영철

“자식들이 밖에 나가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는 건데, 그런 집안은 개판이지 집안이 아니다.”

국방부 대변인, ‘종북 앱 삭제’를 정당화하며

“어디 박근혜 대표 만한 꽃이 있겠냐”
주성영, 공천반으로고 애쓰다

“내 말을 이해 못한다면 당명을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머리당으로 바꿔야 한다.”
이문열, 새누리당 영입설에 화내며

“이상득 장릉은 얼마나 크기에 7억 원을 현금으로 쌓아 두냐.”
네티즌, 과자금이 장릉에 있던 돈이라는 이상득에게

“반대자들은 ‘권력누리당’, ‘부패누리당’, ‘웰빙누리당’이라고 부를 것. ... 유치원 이름으로는 괜찮다.”
박근혜가 못마땅한 조갑제

“폭력 게임이 학교 폭력 조장하면, 방귀대장 뽕뽕이는 방귀를 조장하나?”
네티즌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 국민이 새누리 싫어한다고 거저 먹으려 드는 건가. 국민이 호구냐.”
열 받은 강금실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는 돈봉투 3형제”
한명숙

“[돈봉투는] 축제 분위기[와] ... 동지에 속에서 ... 약간 법을 벗어난 관행 ... 저 같은 희생(은) ... 사상 초유”
박희태, ‘취물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겠다♪ 나뉘 가겠다♪’

“허락해 주신다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피부 관리를?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3월 2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적(건국대앞), 불무절(성균관대앞), 이름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한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송경동 시인 인터뷰

“더 큰 연대와 꿈을 키워 나갑시다”

희망버스의 맨 앞에 섰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직실장이 3개월 만에 석방됐다. 송경동 시인(아래 사진)을 만나서 희망버스 평가와 운동의 과제 등을 물었다.

출소 소감을 들려 주세요.

제가 나오게 된 것은 희망버스 운동이 희망 투쟁이로, 재능 · 쌍용차 투쟁으로, 다른 수많은 투쟁으로 중단 없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둘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운동을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본들은 ‘잘못했다간 시대가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누구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다른 세상을 요구하는 흐름이 있고, 그런 힘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희망버스 운동으로도 터져 나온 것입니다.

희망버스 운동의 의미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경제 위기 이후 우리가 밀려 왔는데 [희망버스 운동으로] 하나의 반격 지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노동운동에 필요한 투쟁과 연대의 정신을 되살려 보자는 제기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외부의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도와줬다’는 것은 맞지 않는 평가입니다. 기존에 조직돼 있는 민중운동에 더해서 미조직 대중까지 함께해 사회적 연대 운동을 만들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모두에게 기쁜 일입니다. 노동진영뿐 아니라 인권 · 장애인 · 성소수자 운동이 실제적 주체로 함께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말도 안 되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1987년 이후 20여 년간 철차

시인 송경동

적 민주주의는 약간 성장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9백만 비정규직 시대, 미래가 없는 세대, 최소한의 생존이 파탄 나는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자라왔습니다. 또한, 정권은 정치적 권리, 인간적 권리로 박탈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이 소외돼서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는 시대가 아닌가요. 분노가 운동이 되는 것은 산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질적 변화를 합니다. 어린이가 말을 배울 때 어느 한 순간 언어를 깨닫듯 운동도 지난한 것 같지만 질적 변화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비정규직 · 쫓돌 · 노동 등 그동안 우리는 운동 속에서 각종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왔고, 희망버스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만나는 용광로가 돼서 사회를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땅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쌍용

시인 이명박

‘쌍용차 3차 포위의 날’ 다른 세상을 요구하는 흐름이 희망버스를 거쳐 계속되고 있다.

차 노동자 스무 명의 죽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단위 작업장의 투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투쟁이지만 전체 전선의 성격을 이해하고 집중해서 달려들어야 합니다. 희망버스 운동이 벌어지자 민주당이 쫓아왔습니다. 이들이 운동에 힘을 보탠다면서 기웃거리고, 왜곡하고, 성과를 가져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물까지 다 녹여서 더 큰 운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더 큰 꿈

을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노동운동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새로운 연대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전체 운동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세계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건 가능할 수도 있고, 그저 꿈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가 수명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인류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주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총선 앞두고 마녀사냥의 불씨를 키우는 이명박

공안당국이 닥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서 조직의 실체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70명이 넘는 인천지역 민주노동 · 통합진보당 ·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납발하고 있다. ‘간첩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친북 활동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왕재산 산하 단체 활동’ 혐의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평통사가 보낸 김정일 조의 문까지 문제 삼았다. 그 조의문은 통일부가 문구까지 확인해 보낸 것인데도 말이다. 평통사 탄압은 최근 평통사가 집중하

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탄압하는 성격도 크다.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한국진보연대 지원’, ‘재일 조선학교 지원’, ‘남북 교육교류’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을 벌였다. 6 ·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간부들도 최근 법정 구속됐다. 공안당국은 애초에 북한의 공작자금을 받은 ‘지령 ·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결국 대부분의 혐의가 터무니없음이 드러나, 고작 책을 소지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앙상한 내용만 남았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황당하게도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도 최근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속됐다.

사진 출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좌파가 이명박의 속죄양이 될 수는 없다.

북한체제에 친화적인 사람들만 탄압받는 것도 아니다. 북한체제를 반어적으로 비꼰 트윗을 쓴 사회당 박정근 당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다.

공안당국이 이토록 닥치는 대로 보안법의 갈날을 휘두르는 것은 그만큼 정권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견잡을 수 없는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마녀사냥이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우파들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2월 23일에 있을 이른바 ‘왕재산’ 사건 결심 공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진보세력의 정부 · 정책 비판과 반대가 모두 ‘북한의 지령’을 따른 것이라는 인상을 주려 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런 야비한 분열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탄압받는 개인과 단체들이 각개약진하기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미진

서기호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 양승태가 물러나야

페이스북에 ‘가까 빚었’ 등의 글을 썼다고 우파의 공격을 받던 서기호 판사가 법원에서 쫓겨났다.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평계일 뿐이다. 서 판사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계시판에 올리고 판사회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활동들이 연임 거부 이유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보자면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2010년 초에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기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 후, <조선일보> 등 우파들의 거친 사법부 비난에 가세한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득권층인 대한변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의 보직, 전보, 연임을 심의한다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는 소위 ‘튀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쫓아내려고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용산참사 판결에서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해서 이명박의 눈에 들고 대법원장에 임명된 양승태가 우파 입맛에 맞게 판사들을 쫓아내고 길들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

고 기자회견,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평소 소극적인 판사들조차 ‘할 말은 하고 살겠다’, ‘평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몇몇 법원에서는 신영철 사태 이후 3년 만에 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신영철이 아직도 대법관으로 앉아서 사법부에 통치를 하고 있는데 소위 ‘개념 판사’는 쫓아내니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제왕적 관료체제를 깨뜨리고 국민이 재판하는 민주적 제도와 시대를 만들기 위해 싸우자. 양운석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지역본부장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2월 25일(토) 오후 4시 장소 미정

MB 심판, 새누리당 해체 범국민대회

주최: 한미 · 한중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사진 출처 Nick Papadimitriou

그리스

긴축에 맞선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아테네에서 파노스 가르가나스

계속되는 노동자 투쟁으로 그리스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월 10~11일에 거대한 총파업이 일어났고 2월 12일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분노의 시위들이 벌어졌다. 이 투쟁은 그리스 의회가 새로운 긴축안을 통과시킨 데 항의해 벌어졌다. 새 긴축안은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IMF, 유럽연합, 유럽 중앙은행이 강요한 것이다.

새 긴축안에는 최저임금 22퍼센트 삭감 방침이 포함됐다.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 삭감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모든 주요 도시들에서 거대한 시위가 있었다. 아테네 의사당 앞에 모인 군중은 여섯 시간 동안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의사당 진출을 시도했다. 경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불가피하게 커다란 충돌과 파괴가 발생했다.

이러한 압력 때문에 연립정부는 조각나고 있다. 파시스트 정당인 라오스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했다. 사회당은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 25명을 출당시켰다. 보수 정당인 신민당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연립정부는 지난해 11월 2백55명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긴축안 통과 때 연립정부는 단지 1백90표를 확보했을 뿐이다.

새로운 긴축안에 맞선 저항은 이미 시작됐다. 병원 노동자들은 매주 다섯 동안 파업, 점거, 시위를 번갈아 가며 벌이기로 결정했다.

긴축안에 포함된 최악의 내용 중 하나는 주택과 담보 주택을 보유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노동자 주택조합을 폐지하는 것이다. 아테네의 노동자주택조합 노동자들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유럽에서 포르투갈 역시 그리스와 비슷한 길을 걸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민중을 위한 디폴트’를 통해 그리스의 부채 상환을 거부해야 한다. 이것은 은행들한테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2백억 유로를 모을 수 있다. 임금 삭감과 사회서비스 축소를 되돌리기에 충분한 돈이다.

여기서 ‘누가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돈은 있다. 그런데 그 돈이 은행들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갈 것인가? 민중을 위한 디폴트는 국유화된 은행 시스템을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로이카’가 구제금융을 통제하며 은행들에게 돈을 주면 이전과 똑같이 운영되면서 똑같은 혼란과 문제를 또 발생시킬 것이다.

그동안 반복해서 은행을 통제하는 데 따르는 모든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 온 노동자들이 은행을 통제해야 마땅하다.

출처 영국의 빈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90호
번역 최용찬

그리스 투사들의 목소리

“우리는 노동자 권력을 바란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노동자 연대〉 편집자

지난 2년간 총파업이 15차례 일어 나면서 급진화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기업주들은 공세에 나서고 IMF와 유럽연합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그리스 정부가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으로는 일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초기 파업 때는 집회가 대규모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었다. 그러나 파업이 계속 일어나면서 상황이 변했다. 평화합원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노조 모임과 피켓 시위가 아래로부터 조직됐고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면서 사수대 조직이 중요해졌다.

바로 이런 조직화 경험에서 새로운 활동가 층이 형성됐다. 이 활동가들 덕분에 이제는 단지 하루 앞두고 총파업이 호소되더라도 단단하게 조직될 수 있다.

모든 작업장에서 모임이 열리고, 이 모임들은 노동자 총회에서 권한



을 위임 받아 각종 위원회들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투쟁들이 더 일반화될 가능성은 최근에 일어난 48시간 총파업에서 확인됐다.

2년 전 첫 번째 총파업이 일어나기 전, 혁명가들은 주도적으로 나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도록 압박했다. 그리스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을 때, 혁명가들은 부채를 상환하지 말라는 요구를 제기했다.

이처럼 혁명가들은 민중의 의식을 날카롭게 하고 그들을 실천으로 이끄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코스타스 카타라치아스

아기오스 사바스 암병원 의사이자 노동조합 서기장, 아테네

몇 주 전 새로운 임금이 발표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30퍼센트나 깎였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의 대출금이 임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받는 임금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리스 병원들의 대략 절반이 폐쇄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벌써 일부 병원들을 폐쇄하려 했지만 우리가 투쟁에 나서 일부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이제 전국의 병원 노동자들이 평화조합원 수준에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평화조합원 모임이 개최된다.

15곳 병원 출신의 노동자들이 아테네에 있는 보건부 건물을 점거하



고 있다. 우리는 병원 노동자 총회를 개최했는데, 노동자들은 전면 파업을 요구했다.

북부 키키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노동자들이 병원 운영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모리스 리트시스

〈엘레프테로티피아〉 노동자 위원회, 아테네 기자 노조 집행위원

우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엘레프테로티피아〉[그리스어로 ‘언론의 자유’라는 뜻]는 그리스에서 둘째로 큰 신문사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2월 15일부터 〈엘레프테로티피아 노동자〉라는 노동자들 자신의 신문을 발행하려 한다.

이것은 그리스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급진화 물결의 일부다.

우리가 파업에 돌입한 뒤 사람들은 파업 신문이 발행되기를 원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공상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곳 노동자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신문을 제작할 것이다.

신문은 우리의 작업장 8백 곳에서



제작될 것이다.

우리는 5천 부에서 시작할 것이다. 〈엘레프테로티피아〉는 보통 최대 3만 부를 발행한다.

독자들은 이 신문에서 트로이카를 반대하는 기사들을 읽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신문을 노동자들이 접수할 때다.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코스타스 피타스 에너지부 노동조합 대의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에너지 설비 민영화 계획에 맞서 에너지개발부를 점거하고 있다. 지난주 화요일 발전 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 50명이 점거에 들어갔고 2백 명이 청사 바깥에서 시위를 벌였다.

우리는 집무실에 들어가 에너지부 장관을 에워쌌다. 출입문을 봉쇄하고 우리와 ‘협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영화하지 않으면 트로이카

로부터 자금 지원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 헛소리 말라고 했다.

에너지부 장관은 경찰이 지하실로 들어와 피켓 시위대를 지나 도피시켜 줄 때까지 세 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이번이 우리가 처음으로 에너지부 청사를 점거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12월 동안 정부부처 15곳을 점거했다. 트로이카가 방문했을 때 그들은 회의할 장소가 없었다.

조지아 코파 국립중고등학교 교사 노조, 아테네

긴축안은 교육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 학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교사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겁먹게 하지만 동시에 분노케도 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하도록 압박했고 이제는 긴축안을 물리치기 위한 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총파업은 끝났지만 우리는 2월 22일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파업을 벌

일 예정이다. 작업장을 점거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교사들은 고무됐다. 우리는 더 진전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동자 총회를 개최하고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학교를 우리 스스로 운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과정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며 공격에 저항하기를 바란다.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3월 초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며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박근혜는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열을 올렸다.

이명박도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박근혜를 지원했다.

그러나 한미FTA를 날치기로 밀어붙인 새누리당과 이명박·박근혜야말로 나라를 맡을 자격이 없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자들이다.

그동안 한미FTA 반대 운동이 주장했듯이 한미FTA는 ‘1퍼센트만을 위한 최악의 협정’이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 허가·특허 연계 제도, 역진방지조항(래치),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은 의료·전기·수도·가스·철도 같은 공공서비스를 한국과 미국의 기업에 넘겨 줘 99퍼센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 확대와 공공서비스 강화 등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려면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위기의 이명박을 레임덕에 완전히 빠뜨린 지난해 연말의 한미FTA 반대 운동은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당시에, 10·26 재보선이 우파의 정치적 패배로 끝나면서 사람들의 자신감을 고무했고, 10월 말 한미FTA 반대 촛불시위가 급격히 커지면서 이명박은 궁지로 몰렸다.

1퍼센트

그러자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을 감히 강행 처리 못하고 머뭇거렸고, 민주당도 반대 운동의 압력을 받아 더 강하게 비준안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민주통합당이 “한미FTA 폐기”를 말하는 것도 이런 한미FTA 반대 운동이 낳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은 비준을 막는 데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

한미FTA를 체결한 장본인인 민주당은 운동에 뒤늦게 뛰어들어 시종일관 불철저하고 모순된 태도로 보이며 운동의 감을 빼는 구실을 했다. 날치기 이후 거리로 나왔던 민주당은 겨우 3주 만에 국회에 등원하며 거리의 저항에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한미FTA 반대 운동의 일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민주당에 의존해 한미FTA를 막으려 했다. 이들은 운동의 요구를 민주당 수준으로 제한했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머뭇거리거나, 독립적인 행동을 주저했다.

결국 민주당이 한미FTA 반대 운동에서 빠져나가자 운동은 더 확대될 수



윤창호 기자

한미FTA는 원활한 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사회를 개조하는 ‘1퍼센트 천국 99퍼센트 지옥’ 협정이다.

없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발판으로 한중FTA까지 검토하며 추진 시기를 저울질하는 한편, KTX 민영화를 추진하며 공공서비스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쇄신 쇼’를 벌여 보수층 일부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박근혜도 한미FTA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보수층 결집의 기회로 삼고 민주통합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려 한다. 새누리당이 한미FTA를 “노무현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발탁돼 한미FTA 1등 공신이 된 김중훈을 공천하려는 것도 이런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를 체결한 세력으로서 모순과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2007년 FTA와 2010년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박근혜를 반박했지만, 정책위의장 이용섭은 “한미FTA 폐기가 목표가 아니다. 재협상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FTA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퍼센트 부자들을 위해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팔아먹는 FTA에 “좋은

FTA”란 있을 수 없다.

사실 민주통합당의 이런 불철저한 입장 때문에 한미FTA 반대 운동이 한창일 때도 원내대표 김진표를 비롯한 협상파들이 운동의 감을 뺐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한나라당에서 오신 분”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네티즌들의 낙천리스트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우리가 집권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하지만, 한미FTA에 대한 견해를 공천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다. 오히려 “노영민·조정식·백원우·박기춘·전병헌 의원 등 한미FTA 협상파가 공천심의위원 다수를 차지”(선대인 세균혁명당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한미FTA를 폐기할 것이라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은 한미FTA 효과를 보려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를 막아내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에 맞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투쟁이 승리하고 성장할 때에만 한미FTA 폐기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한미FTA와 총선 심판 명단 논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한미FTA저지 범국본)는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에 가담한 국회의원 1백51명(한나라당 의원 1백41명 포함)과 통합민주당 협상파 의원 7명(강봉균, 김동철, 김성곤, 김진표, 박상천, 신낙균, 송민순)을 1차 ‘총선 심판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합계를 비롯해 여러 단체들은 “날치기 주범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포함돼야 하고 민주통합당 협상파가 7명밖에 안되냐”며 협소한 ‘총선 심판자 명단’ 선정과 발표에 반대했다.

이번 명단 발표는 민주통합당 협상파로 널리 알려진 41명 가운데 대다수를

구제해 준 것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물밀 협상하고 국회 등원을 통해 날치기를 사실상 승인해 준 민주통합당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면죄부

반면,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는 “민주통합당과의 공조를 유지하려면 민주통합당 전체를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런 결정을 옹호했다.

이 때문에 한미FTA저지 범국본 소속 단체들 사이에 ‘총선 심판자 명단’ 선정과 발표 여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한미FTA를 체결한 민주당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한 한나

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해 1차 ‘총선 심판 대상자’를 발표하는 타협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를 모아내는 구실을 했을 뿐 아니라 민주통합당에 대한 불신도 확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본이 협소한, 그래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총선 심판자 명단’ 발표에 치중할 게 아니라 진보의 가치(한미FTA 완전 폐기, 복지와 민주주의, 노동 문제 등)를 옹호하며 실천해 온 후보와 진보정당들에 대한 지지로 힘을 모아내는 게 옳다.

최영준

모든 비리 의혹은 이명박으로 통한다

» 1면에서 이어짐

지난해 말 한나라당 친박계 이혜훈은 “싱가포르를 주목하라”고 기자들에게 강조했다.

BBK 실소유주 기업으로 의심받는 다스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다는 것이다.

다스는 이명박의 형 이상은이 대주주고, 아들 이시형이 근무한다.

이제 다스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압

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범죄인 인도 협정도 맺어져 있지 않다.

즉 도곡동 땅과 BBK를 잇는 다스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상득의 만아들 이지형도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권이 바뀌면 권력형 부패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MB 일가가 의혹의 핵심 근거지들을 빼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나올 만하다.

지금 이지형이 일하는 BRIM이란 회사는 이상득 연루설이 나오는 CNK가 1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NK 주가 조작 사건 발각 후 <조선일보>조차 이명박·이상득 형제의 자원외교 전반에 의혹을 제기했다.

자원외교 과정에서 오고 간 돈들과 이상득의 괴자금의 연관성도 의혹의 대상이다.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은 모두 이 정권의 최고

실세그룹인 옛 ‘6인회’ 멤버들이다. 이들이 특권을 위한 입법과 부당거래를 위해 받아 챙기고 돌린 돈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각종 의혹 사건에서 온통 비서와 보좌관들 수준에서 검찰 수사가 지지 부진한 것은 분통터지는 일이다.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권력형 부패의 정점에는 바로 이명박이 있다.

김문성



민주통합당과 NGO — 진보는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을 뛰어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그동안 민주당 바깥에서 세력을 키워온 친노세력과 진보적 NGO 인사들, 그리고 한국노총과 합당한 것이 대중의 기대감을 키웠다.

‘좌클릭’ 정책 발표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무시하던 진보진영의 요구를 요즘은 거의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양상은 민주통합당의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화됐음을 보여 준다.

특히 김기식, 남윤인순, 이학영 등 진보적 NGO의 핵심 리더 출신들이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이 성격이 강화됐다.

이들은 NGO들이 오랫동안 표방하던 ‘정치 중립’에서 벗어나 시민정치운동 조직을 만들어 야권연대를 주도하다가 민주당에 입당했다. NGO의 ‘대부’였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곧 민주통합당에 입당할 듯하다. 이 점은 한국노총이라는 노동 기반과 함께 민주통합당의 다계급적 기반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지난 호 <레프트21> 기사 ‘돌아온 친노,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민주통합당의 자본가계급 기반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한 것은 다소 부정확했다. 물론, 민주통합당의 주요 기반이 자본가계급에게 있고, 그것이 민주통합당의 한계라는 주장은 옳았다.

‘비정치적 사회운동’에서 정치세력화로

남윤인순 씨는 정당에 직접 뛰어들 계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난 3년간 정책을 요구하고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크게 무력감을 느꼈다. “정치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 제도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날아라! 여성』)

사실, NGO들은 ‘비정치적 사회운동’을 표방하면서도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개혁입법을 위해 정치인들을 만나 설득하고 로비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활동이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전 협동사무처장은 NGO의 활동 방식을 두고 “평상시 운동



민주통합당에 결합한 NGO 활동가들은 과연 ‘자장면 위의 완두콩’을 넘어서 나갈 수 있을까

에서의 가치나 정책은 진보정당과 친화성이 더 크고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현실 정치를 선택할 때는 민주당으로 휩쓸려 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진보의 합창>)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NGO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불만을 어느 정도 흡수하려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런 끈들이 느슨해지거나 사라졌다. 이것은 NGO 인사들이 정치운동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절박감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NGO들이 ‘정치 중립’을 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정치적 견해를 내놓고 토론하는 것이 더 낫다.

NGO들도 대안적 정치세력을 창출하는 데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어떤 정치나가 진정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NGO 출신 대부분이 택한 정당은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들의 바람대로 “정치체제를 바꾸”고, NGO의 진보적 정책을 실현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에서 NGO가 앞서 민주당 정부에 긴밀히 개입하고 참여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시민운동은 보수화되어 가는 노무현 정부와 구분되는 독자적 사회 비전을 갖춘 독립적 주체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해 동반 추락 효과를 면하지 못했다는 성찰적 평가를 한 바 있다.

파병, 한미FTA 등 노무현 정부의 보수적 정책들에 NGO들이 맞서는 일이 여러 차례 벌어졌음에도, “한두 사안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문제였을 때 시민단체들은 운동이 정권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했[고] … 실패한 정권을 대체할 전략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던 것”이다(김학영,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그런데 이렇게 노무현 정부와 동반 추락을 겪던 NGO들이 몇 년 만에 그 세력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어떤 정치나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 당에 대한 불신이 겹친 것은 아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전 협동사무처장도 박원순 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는 한미FT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 … 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정책 실패 책임은 눈감은 채, 하루아침에 ‘시민’, ‘혁신’, ‘진보’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경훈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통합진보당이 “재벌과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며 19대 총선 5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5년 이내 노조 조직률을 20퍼센트, 단체협약 적용률을 50퍼센트로 확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 파견 철폐,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25퍼센트 대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했다.

2월 11일에는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수도권 총선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굳건한 연대와 투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후순위로 밀리고 ‘총선 5대 비전’에서도 ‘노동’이 빠졌던 것에 견줘 볼 때, 최근 통합진보당이 ‘노동’ 정책을 강조하며 노동계급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런 방향이 더 강화돼 진보의 정체성과 투쟁성, 노동계급 중심성에 부합하는 후보들이 출마하길 기대한다.

그런데, 울산 남구갑에서 현대차노조 이경훈 전 지부장이 통합진보당 예비후

보로 출마하면서 이러한 노력과 진정성을 깎아먹고 있다. 이경훈 후보의 출마는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전면으로 내건 통합진보당의 노동 공약과 모순이다.

이경훈 후보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경훈 후보는 고작 1년 전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사실상 파업을 파괴한 장본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저 같은 현장 출신이 현장 정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경훈 후보의 말에 활동가들이 역겨움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파업 당시 분신을 시도했던 황인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그를 따라다니며 낙선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현직 간부들이 이경훈의 출마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가입하려던 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이경훈이 후보로 출마한다면 반대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당원인 울산2공장의 정규직 조합원도 “이경훈이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악법들을 제대로 막아낸 게 없다. 미디어법, 한미FTA는 말할 것도 없고, 한명숙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조용환 대법관 임명 부결조차 막지 못했다.

한명숙 대표는 새누리당의 ‘X맨’이라는 김진표를 원내대표로 유임시켰고, 공천심사위원회에 한미FTA 협상파 인물들을 앉혔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지금 새누리당의 강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조국), “민주당 의원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선대인)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무능’은 단지 김진표 같은 소수의 ‘X맨’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같은 친노세력도 “한미FTA 반대 논리가 과장돼 있다”며 폐기 입장과는 거리를 뒀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에 새로운 세력이 일부 들어올지라도 그 핵심 인적·재정적 기반은 여전히 기업가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안희정·이광재 등 친노 정치인들도 기업과의 부패 사슬에 연루돼 왔다. 더구나 이들은 부르주아 야당으로서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민주통합당이 기업주와 부자 들의 반발을 뚫고 지금 내걸고 있는 ‘좌클릭’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아래로부터 투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목격했듯이, 민주통합당은 그 계급적 기반의 한계 때문에 이런 저항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함께할 수 없다.

그 점에서 “시민운동이 또 한 번 민주당에 물 대주는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금은 진보정치가 확장성을 갖도록 힘을 실어줄 때”라는 박원석 참여연대 전 협동사무처장의 지적은 타당하다.

최미진

폴라주 68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이제 소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돈 나게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일투전

조윤경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의 호소

“진보의 정치적 자질은 억압과 차별 받는 계층에서 나오는 윤보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층적 감수성을 정치로 녹아낼 분이 비례후보로 가장 적합합니

다. 여성 장애인인 [통합진보당의] 비례 후보 할당에 우선시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진보 정치의 의미이자 가치에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김기선

처벌로 학교폭력 해결?

이명박 정부야말로 ‘일진’이다

2월 6일 정부는 처벌과 규제 강화를 골간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소수 일진 학생’을 격리해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교사들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부터 정부는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교사들을 사법처리하고, 경찰이 졸업식 날 학교에 진을 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엔 경찰들이 학교마다 찾아와 일진 학생의 명단을 내놓으라며 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인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새삼스레 과장하고 부각시키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정부의 심각한 위기를 가리고, 선거를 앞두고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다. 역대 정부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범죄와의 전쟁” 등을 벌이며 저항을 억눌렀다.

게다가 정부 대책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부적절한 방안이다.

학교폭력에서는 피해 학생이 다른 곳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등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소수 일진 학생’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조치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방안은 학교와 사회에 대한 깊은 복수심을 만들어 낸다. 생활 지도를 하는 교사라면 징계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을 키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처벌 강화는 폭력적으로 왜곡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영영 인간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한다.

《이전생의 학교폭력 평정기》라는 책을 보면 학교폭력에 관해 현장 교사들이 8년여간 진행한 연구가 나온다. 그 책을 보면 복잡하게 얽힌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막으려고 때로는 사건을 일시적으로 숨기



‘앞으로 두 달간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경찰 충선 때까지 치고 빠지겠다는 의도가 뻔하다.

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사려 깊은 방안은 정부의 방안이 따르면 사법 처리 대상일 뿐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학교폭력이 심각한 경쟁 교육과 소외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교육계의 상식이다. 실제로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소외된 MB 정부를 지나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학교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체제의 피해자인 학생들과 일선 교사들에게 떠넘긴다. 실제로 피해 학생 상담·보호·치료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의 구제 비용까지 개인들에게 떠넘기려는 방안은 역겹기까지 하다.

그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우익 언론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킨다는 글을 쏟아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입시 경쟁, 비민주적 학교 운영, 체벌 등을 완화해 학교폭력을 양산하는 비인간적인 교육을 바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우파들의 선동과 달리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상호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습 부진에 대해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진도를 벗어나 자유롭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정치 참여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도 정치·사상을 자유롭게 밝히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면 경쟁 교육을 강요하는 정부에 맞서 교사와 학생의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일제고사와 입시경쟁, 교원평가 등을 없애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추구하는 경쟁적인 교육과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 투쟁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연대식과 자신감이 높아질 때 진정으로 폭력이 없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태현 전교조 교사

검찰의 김승환 전북 교육감 기소 규탄한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교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기소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조금도 ‘졸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검찰과 정권을 조소하며, “반드시 무죄판결을 얻어 낼 것”이라 했다.

앞서 교교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2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검찰 기소는 정당성이 없다.

사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 양심에 따라 정치적인사를 표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서 교사들은 경쟁 만능 학교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가 성사되고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 오세훈이 패배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교사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소신 있게 진보적 교육 정책을 추진해 온 김 교육감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싶어 한다. 전북 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 교교부의 교원평가제 거부, 일제고사 전면 거부 등 김 교육감은 1퍼센트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김 교육감은 교교부의 압박에 밀려 ‘교원평가제 반대’ 입장에서 흔들린 적도 있지만 전교조 전북지부의 교육감 접견실 점거 투쟁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방침을 거부하고 “자체시행안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따라서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곧 그의 개혁 추진의 원동력인 진보 운동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이현주

진보의 대안 논쟁

누구의, 무엇을 위한 재벌 개혁인가

최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일부 진보단체들도 이 쟁점을 부각시킨다. 새누리당마저 재벌 때리기 시늉을 하며 이 분위기에 올라타려 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재벌에게 느끼는 분노에 공감한다. 그러나 재벌 개혁론이 가리키는 방향과 대안은 우려스럽다.

재벌개혁론은 주로 재벌의 소유 구조를 문제삼는다.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처럼 사업을 확장하는 재벌을 가능한 날개의 기업으로 떼어 놓자는 것이다. 그룹경영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주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재벌보다 주주 중심 기업이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재벌개혁론자들은 민영화된 KT를 모범으로 추켜세웠다. 그러나 KT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라 몇 년 만에 노동자를 무려 3만 명이나 해고했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실적 압박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졌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동계급의 관점은 빼놓은 채 더 경쟁력 있는 기업 모델만 제시하려 한다. 통합진



강력한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만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재벌에 제대로 맞설 수 있다.

보당 이정희 대표도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그 효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 서다 보면 재벌 기업의 노동자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MF 때 김대중 정권이 ‘재벌 해체’를 내걸고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많은 재벌개혁론자들은 그것이 낳는 노동자 공격에 일관되게 맞서지 못했다.

유토피아적

게다가 재벌개혁론은 공상적이기도 하다. 시간이 갈수록 더 소수에게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성과 같은 것이다. 마르크스는 “축적을 위한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력이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이때문에 오늘날 세계 15대 기업의 수입을 합한 것이 1백20개 나라의 수입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그래서 재벌 개혁이 경제적 집중도를 완회시킨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일본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재벌을 해체했지만 곧 새로운 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새로운 형태의 기업 집단이 등장했다.

그래서 재벌개혁론은 자본의 집중을 해소하기보다는 흔히 자본 내 다른 분파

를 지원하자는 생각으로 연결됐다. 예를 들어 1997년 경제 위기 때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론을 활용해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게 한 IMF의 방안을 밀어붙였다.

최근의 재벌개혁론은 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또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자본가 내 일부 세력과 연대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재벌 개혁론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주들의 이해관계는 노동자의 이익과 충돌한다. 중소기업주들은 재벌·대기업과 같을지도 하지만, 재벌과 함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열악한 조건에서 착취하는 주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

복지 확대,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재벌개혁론은 진정한 문제를 가리는 구실도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알맹이 없는 재벌개혁론에 휘말릴 게 아니라 재벌·대기업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자본의 집중이 낳는 모순된 효과를 봐야 한다. **자본의 집중은 노동자들**

도 집중시킨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운다면 재벌 체제의 심장부를 움켜쥐며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해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여부에 지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재벌·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성취하도록 고무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런 투쟁의 성과는 비정규직과 사회의 다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국가가 나서서 재벌에게 증세를 하고 그 돈으로 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통신·에너지·금융 등 공공적 성격이 큰 부문은 재벌의 돈줄로 놔두지 말고 국유화해야 한다. 통합진보당도 강령에서 ‘국가 기간산업 국공유화’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체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재벌·정부한테 이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투쟁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이 생산수단과 국가 권력을 직접 소유·통제하는 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사회를 통해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정선영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KTX가 해마다 3천억 원에 이르는 높은 순이익(수익을 30퍼센트)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이 돈으로 일반 열차나 비수익 노선을 지원했다.

결국 KTX 민영화는 KTX 부문의 높은 수익을 쪼개, 일부를 생색내기 요금 인하 등에 쓰고 나머지를 민영 KTX 회사에 넘기겠다는 정책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선전하는 민영화의 효율성이라는 마술적 효과 따위는 없다. 사실상 새마을·무궁화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철도공사의 적자가 대폭 늘어날 뿐이다.

철도공사의 적자가 더 늘어난다면 일반 열차나 비수익 노선 운영은 줄어들거나 폐지될 공간이 크다. 결국 철도 서비스의 질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고, 일반 열차를 타던 사람들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KTX를 타야 해 철도 요금 인상 효과가 날 것이다. 고속버스에서도 우등고속



2월 4일 6천여 명이 결집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결의대회 구조조정의 불씨를 키우려는 이명박의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했듯이 말이다.

구조조정의 불씨

게다가 철도공사의 적자 확대로 민영 KTX 회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명백히 대기업에 대한 특혜다. KTX 민영화에 눈독을 들이는 동부건설과 대우건설 사장은 친이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KTX 민영화를 몇몇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지배자들의 이해관계를 협소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가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민영 KTX 회사의 대기업 지분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대책도 내놔다.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나 이와 관련된 철도공사의 적자 증가를 이용해 공공부문 구

구조조의 불씨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하는 최근 상황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을 것이다.

이미 보수언론들은 철도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5천8백만 원에 이르는 ‘귀족 노동자’라고 비난하며 KTX 민영화의 목표가 노동자 공격임을 보여 줬다.

그러나 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공기업 27곳 중 25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명절·공휴일·야간도 가리지 않고 일해 받은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KTX·새마을호 승무원 투쟁이나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공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을 대폭 늘렸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 KTX 회사의 인건비가 철도공사의 70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민영 KTX 회사에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뜻이다.

민영 KTX 회사의 저임금은 철도공사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철도공사의 적자 증가로 비수익 노선들이 폐지되면 정리해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철도 구조조정은 다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것이고, 민간 기업 부문 구조조정 드라이브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KTX 요금 인하”를 내세우며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을 이간질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늘지 않는다면 철도 서비스의 공익성과 전반적인 철도 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하며 싸워야만 철도의 공익성을 지킬 수 있다.

강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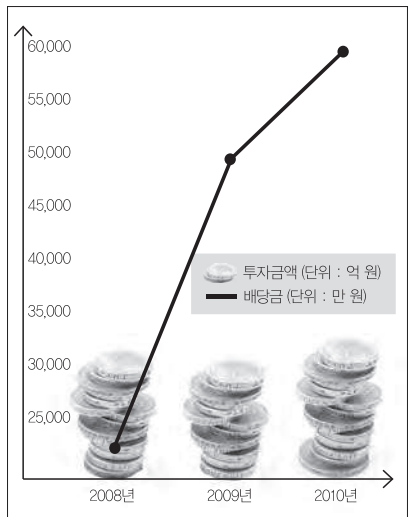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이 글은 2008년 <맞불> 84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잘 보여 준다.

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통신업계는, 특히 민영화된 KT는 정부의 말 한마디에 별별 뻔뻔한 예전의 공기업 한국통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있지만 현재의 SKT·LG대이콤 등 모든 통신사업자는 과거 KT의 자회사였고, 지금도 KT의 회선과 장비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의 투자금액과 배당금 투자는 제자리걸음인데 배당금만 폭등했다.

역대 정권들은 임기 말에 꼭 KT의 자

회사 중 돈벌이가 된다 싶은 사업들을 하나 둘씩 재벌에 넘겨줬다. 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깃털 몇몇이 구속되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IMF 경제 위기가 닥쳤다. 이번엔 아예 한국통신을 통째로 팔기로 했다. 뉴욕 증시에 직장장했고 이를 위해 이름도 ‘케이티(KT)’로 바꿨다. 이로써 국민기업 한국통신은 의결 가능 주식, 곧 배당주식의 3분의 2가 외국인 소유인 사기업 KT가 됐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 그대로다. 먼저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닥쳤다. 한때 6만 5천 명이 넘던 KT의 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3만 7천 명에 불과하다.

민영화가 추진된 2002년을 전후해서 KT의 매출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2000년 33.9퍼센트에서 2004년에는

15.3퍼센트, 2005년에는 17퍼센트 등으로 크게 낮아졌다.

투자 감소는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05년 2월 경기남부·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화 먹통 사태다. 112, 119 등 사회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신마저 두절시킨 이 통신 대란은 민영화 이후 KT가 전화 통신망을 빼듯이 운영한 게 원인이었다.

효율

한편, 이러한 과격한 구조조정과 공공성을 위협하면서 단행된 투자 축소 덕분에 KT의 당기순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나 그 과실은 철저하게 주주들의 몫이었다. 그것도 해외투자자 우위의 주주 말이다.

우리는 자본이, 국가가 얘기하는 그 효율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사람들을 일터에서 쫓아내고 6만 5천 명이 하던 일을 3만 7천 명이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인건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여서 크게 늘어난 이윤을 해외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누구나 가격부담 없이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가?

오늘날 통신은 사회의 필수재가 됐다. 우리는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쯤 던져야 한다. 통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기처럼 존재하려면 우리 민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것은 민영화의 역코스가 아니겠는가!

이해관 KT 노동자, 전 KT노조 부위원장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임기를 1년 남겨 둔 이명박 정부는 최근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곧이어 청주공항을 민영화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이 더 싸고, 더 잘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책이 폭로하는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는 모두 재앙과 참사를 낳았다.

영국 철도는 민영화된 6년 동안 철도 요금이 오르고 정부 보조금도 증가했지만, 시설 투자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5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물 민영화 이후 요금이 1백40퍼센트 인상됐지만, 수질은 저하돼 35만 명이 콜레라에 감염돼 3백 명이 사망했다.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미셸 라이몬,
크리스티안 펠버 지음 |
김호균 옮김 |
시대의창 | 351쪽 |
1만 6천5백 원

영화 <식코>로도 악명이 높은 미국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13퍼센트 이상을 쓰며 가장 비싼 보건 의료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지만, 4천5백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저자들은 이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서

로 ‘흡사한’ 재앙을 관통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 답은 바로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가질 권리가 있는 것들을, 소수가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게 만드는 민영화 정책 자체에 있다.

비용 전가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 기업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성격의 요금 체계를 파괴하고 요금을 올리기 마련이다. 그 결과 기업들의 수익은 개선되지만 실업자 증가, 환경 파괴, 각종 사고뿐 아니라 온갖 은폐된 비용들은 모두 사회 전체의 몫이 된다.

민간 기업들은 공기업 중 수익성이 좋

은 부문만 사들이고, 손실을 초래하는 부문은 세금으로 운영하거나 폐기한다.

민영화된 서비스는 정부가 주장하는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독과점의 원리가 지배한다.

프랑스 다국적 기업인 수에즈와 베올리아(전 비방디)는 프랑스 물 시장의 75퍼센트, 전 세계 물 시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점유한다.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상극일 수밖에 없다. 1980년대에 마거릿 대처가 처음으로 “민영화”를 발명했을 때도 대다수 국민을 굴복시키며 인기 없고 논란이 많은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민영화 실패자

들이 강요하는 시장 원리가 결코 “자연법칙”이 아니며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

이 책이 쓰여진 2000년대 초반은 민영화에 맞서 “전 세계의 사회운동, 세계화 비판자, 노조 활동가들의 저항”이 살아난 때였다. 일례로,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수도 요금 인상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물 전쟁’을 벌여 다국적 기업인 벡텔을 몰아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KTX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버르는 상황에서, 이 책은 정부의 거짓말을 속시원하게 반박할 풍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소은하

서평





2월 11일 이집트의 시계 광장에서 순교자들을 기리며 행세하는 시위대
실인자 정권이 몰려 나 71년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갈등이 레바논으로 번지다

시리아 정권은 레바논 저항 조직인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하마스는 다행히 알아사드의 억압을 지지하지 않고 시리아와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여전히 알아사드를 지지하며 타락해 버렸다. 이는 레바논의 저항 운동에 장기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홈스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가 분명해졌는데도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TV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홈스에 사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들은 ‘별일 없다’고 답했다.”
나스랄라의 말은 시리아 인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시리아 인들은 이스라엘의 폭탄을 피해 도망친 레바논 난민 수만 명을 받아줬다. 당시 많은 시리아인들이 심각한 빈곤에 처해 있었는데 말이다.
이런 시리아 인들에게 나스랄라의 말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리아의 시위대는 냉혹한 배신에 항의하려고 헤즈볼라의 깃발을 태우기 시작했다.
반면,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시리아 정권의 탄압을 비난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헤즈볼라의 핵심 청년 회원들도 담배락에 “바레인 혁명의 승리!”와 “시리아 혁명의 승리!” 같은 낙서를 계속 하고 있다.

서방에 구애해 온 시리아 지배계급

프랑스 식민 지배가 끝나고 1946년에 생겨난 시리아는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안정된 사회를 건설하고자 투쟁해 왔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마스쿠스에서 겨우 50마일(약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다. 이 군대는 196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골란 고원을 점령한 이래 그곳에 계속 주둔했다.
따라서 서방 제국주의와 그 동맹들이 시리아에 가하는 위협은 현실적이다.
바사르 알아사드의 아버지 하피즈 알아사드는 1970년 쿠데타로 집권했다. 하피즈 알아사드는 이스라엘과 타협하려 했다.
그래서 1976년에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민중이 자신들의 친서방 정부에 맞서 항쟁을 벌이고 있을 때, 혁명이 승리하기 직전

에 시리아 군대가 레바논을 침공해 들어와 진보 세력을 분쇄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집트와의 평화협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리아 정부를 외면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도 하피즈는 미국의 편에 서서 군대를 파견했지만, 그의 구애는 다시 퇴짜를 맞았다.
바사르 알아사드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며 자기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갔다. 바사르 알아사드 정권은 서방이 비밀리에 추진한 “고문을 위한 용의자 인도”를 돕고 이라크 국경을 봉쇄해, 미국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의 입국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런 구애는 모두 실패했지만, 반제국주의 저항 운동에는 큰 피해를 줬다.

시리아 저항 세력은 누구인가

시리아 저항 세력은 크게 세 세력으로 구성된다.
지역조정위원회(LCC)는 기존의 지도부를 대표한다. LCC의 영향력은 붕괴 초기부터 계속 성장해 지금은 많은 수의 작은 마을들을 포함해 도시 14곳을 포괄한다. 이런 풀뿌리 위원회들은 일상적 시위를 조직한다. LCC는 스스로 시리아 전역의 저항 세력을 조율하는 상부 단체로 여긴다.
이 위원회들과 나란히, 자유시리아군(FSA)이 탄생했다. FSA는 소수의 무장 집단 간인, 그리고 저항세력으로 이탈해 온 군인들로 구성된다. FSA는 두려움의 대상인 사바하 보안대원에서 주민들을 지키려 한다. 비록 정권의 중화기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말이다.
여름이 지나면서 시리아 국가위원회(SNC)가 생겨났는데, 이들은 리비아의 과

도국가위원회를 모델로 삼는다.
SNC는 망명가, 친서방 인사들, 지난해 동안 정권 내부에서 이탈한 인물들로 구성된다. SNC는 자신들의 주요 과제를 서방과 아랍 지배자들의 지지를 모으는 것으로 본다. SNC는 혁명의 머리에 올라타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많은 시리아 인들은 SNC를 깊이 불신한다. 시리아 인들은 SNC를 “망명 정부”로 인정하려는 호소에 반대했다. FSA도 SNC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SNC는 민중 봉기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듭 제국주의와 친서방 아랍 국가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SNC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외국 개입에 반대하면서 대체로 실패한 듯 보인다.
출처 영국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89호
번역 차승일



사이먼 아사프가 바사르 알아사드 정권과 그에 맞선 항쟁의 성격을 평가한다.
사이먼 아사프는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의 공저자다.

한때 시리아의 공식 깃발은 빨강-하양-검정 띠를 사용한다. 최근 시리아 저항 세력은 초록-하양-검정 띠 깃발을 반정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깃발은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독립할 당시에 사용하던 깃발로, 독립을 의미한다.



“아사드는 돌아나라!”

타도”가 아니라 “개혁 실행”이었다.
알아사드는 TV에 출연해 “협화”, “변화”, “대화”라는 모호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알아사드가 개혁을 시행하리라 하는 기대는 첫 번째 공식 야당 회의에서 야당 대표가 구타당한 뒤에 사라졌다. 야당 대표는 알아사드를 과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카마라 앞에서 구타당했다.
국가의 시위대 살해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늘었다. 사람들은 보안대 건물 앞에서 외쳤다. “이게 바사르의 개혁이야?”
곧 더 불길한 구호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중은 지배자를 처형하기 바란다.”

중단주의
그동안 조용하던 마을들에서 대중 시위가 터져 나왔고, 그 시위들은 데라, 하마, 홈스 같은 도시의 시위에 연대를 표했다.
거리 운동과 보안대 사이에 있던 많은 시리아 인들은 나라가 종단간 전쟁으로 몰락할까 봐 두려워했다.
종단주의는 시리아 정권의 장수(長壽) 뒤에 있는 더러운 비밀이다. 시리아 지배자들은 역사적으로 탄압하던 소수자인 알라위파 집단에서 중립했다.
많은 평범한 알라위파들은 혁명에서 떠오른 수니파 무슬림이 정권을 장악하면 “다시 산악지대로 쫓겨날

출처 영국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90호
번역 차승일

서방 개입 반대가 독재자 지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서방 지배자들은 대중이 야만적인 정권들한테 느끼는 혐오감을 개입 명분으로 활용하려 애쓴다.
군사 개입으로 억압적인 정권 아래 신음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다.
시리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서방 국가들의 개입이 이 정권을 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서방 개입 반대는 곧 독재 정권 지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방 지배자들은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기꺼이 그들을 지지해 왔다.
미국은 이집트의 무바라크와 튀니지의 벤 알리가 권좌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그들을 지원했다. 이집트 군부는 지금도 미국산 최루가스로 시위대를 탄압한다.
그리고 서방의 이른바 “인도주의적” 지배자들은 중동의 독재자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살인과 파괴를 일삼았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은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열강들이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을 죽였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미국 주도 이라크 전쟁으로 1백만 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핵폭탄을 투하한 적이 있는 유일한 국가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서방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서방 제국주의와 그들의 동맹국들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협이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주장했듯, 제국주의는 저항과 반란도 창출한다. 그런 반란은 제국주의 열강을 약화시키고 혁명적 운동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가 혁명적 정치의 핵심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독재 정권에 대한 제국주의 개입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독재 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독재 정권을, 그리고 그것을 낳은 체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에 있어 다른 비전이 있다.
출처 영국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89호
번역 조영훈

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다. 거리의 대중 저항과 작업장의 파업이 독재자를 끌어내렸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은 단지 독재자 퇴진만을 목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독재에 맞서 싸운 사람들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아랍의 반란과 연대해 한편에 서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랍의 반란을 위태롭게 만들 어떤 세력에도 반대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손길”이 그런 구실을 할 것이다.
이 사회의 진정한 분단선은 문명화한 서방 지도자와 후진적 독재자 사이가 아니라,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과 지배 계급 사이에 있다.
이 분단선을 없애려면, 우리의 지배자들이 유혈남자한 전쟁을 개시할 때 그들과 한편에 서면 안 된다. 반대로 지배자들에 맞선 운동과 이들이 벌이는 전쟁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건설해야 한다. 지배자들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들은 더욱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튀니지와 이집트를 휩쓴 고무적인 혁명들

군부에 맞서 싸우는 이집트 민중

호삼 엘라말라웨이(이집트 신문 《엘바달》 기자)

2월 11일 이집트 전국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노동자와 학생 등이 파업을 벌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가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투쟁이었다.
이날은 호스니 무바라크가 시위와 파업의 압력으로 사임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파업 참가자들은 이집트 군부에 권력을 민간 정부에게 넘기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장군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군들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날 시위에 참가하면서 학교 수백 곳의 문을 닫았다.
1919년 영국 점령에 항의하는 혁명 이후 이런 행동이 벌어지기는 처음이다. 이번 학생 파업 직전에 포트 사이드 축구 경기장에서 알아흘리 팬 70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최고군사위원회와 보안군이 지난해 혁명을 지지했던 조직된 축구팬들 — ‘올트라스’ — 에 보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이 학살 사건에 충격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집트 중간계급뿐 아니라 일부 엘리트들까지도 최고군사위원회에 등을 돌리게 됐다.
학살 이후 알렉산드리아, 만수라, 마할라, 바니수에프에서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탄압을 당했다. 사복 경찰과 보안군은 RS 활동가들을 습격해 2월 11일 파업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찢었고 이 단체의 붉은 깃발을 불태웠다.
국영 언론과 무슬림행세단 신문 — 양자 모두 2월 11일 파업에 반대했다 — 도 RS를 모함하는 음모작에 동참했다. 그들은 RS가 폭력과 파업을 조장해 경제를 파괴하며, 심지어 CIA 요원이라고 모함했다.

모함
무슬림행세단과 살라피 운동 회원이 다수인 이집트 국회의원들도 파업을 비난했다. 이 두 집단은 지난해에도 최고군사위원회에 맞선 투쟁에 참가하기를 꺼렸다.
그들은 군부와 권력을 분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장군들에게 안전을 보장했다.
1월 23일 개최한 회의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표적이 됐다. 대다수 의원이 내부부의 시위대 탄압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RS는 계속 투쟁을 조직했다. 그들은



2월 10일 이집트 국방부 앞 시위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군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다한 ‘행차’를 행하듯 손을 잡고 2월 10일 대규모 시위를 벌여 카이로의 국방부 건물을 포위했다. 같은 날 다른 주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슬람주의자들은 이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학과 학교의 파업은 성공적이었지만 다른 곳 노동자들의 반응은 약했다.
이것은 예상한 것이었다. RS를 포함해 어떤 정치 세력도 아직 작업장에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이집트독립노조연맹은 이번 파업을 지지했다. 명목상 이 단체는 노동자 2백만 명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 신생 단체는 아직 기존 노동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어용노조는 이번 파업에 반대하는 전쟁

을 벌였다. 어용노조 소속인 지상운송노조는 버스 운전사들에게 강제해 버스 앞 창에 파업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붙이도록 했다.
대학가의 상황은 훨씬 좋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파업을 계획하는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집트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양대 투쟁 무기들 — 혁명 정당과 독립 노동조합 — 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출처 영국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90호
번역 김용욱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미국의 ‘후반전’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미국도 이제 하프 타임입니다. … 미국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슈퍼볼 경기의 하프 타임에 방영된 크라이슬러 광고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던진 멘트다. 이 광고는 그 뒤로 거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공화당의 핵심 책략가 칼 로브는 이 광고가 오바마를 위한 정치 선전이라고 주장했다.

크라이슬러는 한때 세계 자동차 업체를 주름잡은 지엠(GM)과 더불어 2009년 초 오바마 정부에 의해 파산으로 내몰렸다. 미국 재무부는 두 회사의 대주주가 됐고 전미자동차노조(UAW)에 다수의 공장 폐쇄와 신규 인력에 대한 임금 및 복지혜택 삭감을 골자로 한 잔인한 합의안을 강요했다.

이제 지엠과 크라이슬러 모두 생산과 매출이 오르고 있다. 이는 더 크게 보아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2년 사이 미국의 생산직 일자리 수는 40만 개 늘었는데, 이는 선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이렇게 보도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겠다는 미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도요타는 하일랜더 SUV 모델 생산을 일본에서 미국 인디애나 주로 이전하려고 4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인 4백 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이번 주에 밝혔다. 심지어 중국으로 이전했던 공장을 ‘리쇼어링’[‘오프쇼어링’의 반대말, 해외로 이전한 공장을 다시 국내로 이전하는 것]하는 기업들도 있다. 중국이 거대한 제조업 호황을 누리긴 했지만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전체의 산출량과 고용도 비록 더딘 속도지만 증가하기 시작했다. 침체된 경기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지지율이 형편없던 오바마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관

갈수록 가관이 돼 가는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도 오바마의 11월 재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이른바 선두 주자라는 모르몬교 출신의 사모펀드 재벌 미트 롬비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정치인인 뉴트 깅그리치, 동성에 혐오가 장기인 가톨릭 신자 릭 샌토럼, 그리고 남북전쟁에서 남부연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금태환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론 폴 같은 경쟁자들을 여전히 따돌리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미국 지배계급이 오바마보다 이 일간이·미치광이들 가운데 한 명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따지고 보면 오바마도 지난달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복귀”를 선포하는 등 최근 들어 무척이나 제국주의적인 언행을 보였다.

국정연설 직전에도 오바마는 네이비실 부대의 기습 작전을 성공시킨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의 공로를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더티 해리[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오바마를 찬양할 만도 하다.

정치 철학자인 앤드루 레빈은 이렇게 논평했다. “오바마가 최근 들어 [네오콘들의] 주된 논지를 수용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지 않았고 오히려 또 한 번의 영광스러운 미국의 세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논지 말이다. 이런 주장이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미 제국이 큰 압초를 만나지는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항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 지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몰락을 말하던 최근의 논의들이 대단히 과장돼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바마가 로널드 레이건을 흉내내듯 “미국에 아침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

미국 경제의 호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가 바닥을 기었던 것에 견주면 나아진 것이고, 경쟁자들의 상황에 견주면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양대 수출 대국인 중국과 독일의 경기도 둔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의 늪에 빠져 있고 이 위기는 급방이라도 더 나빠질 수 있다. 게다가 오바마가 미국의 군사적 개입 수위를 낮추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지역, 즉 중동에서 거센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이란을 보라.

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견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인다면 미국 지배계급은 머지않아 자기 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번역 천경록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중단하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일본 사이의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지침이 15년 만에 개정될 듯한데, 〈산케이〉신문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대 중국 해양 전략’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은 일본 해상 자위대가 동중국해 등지에서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구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최근 주일 미군 재배치 논의에는 오키나와의 미군을 괌, 호주 등으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일본의 구실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키나와는 중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2~3월에 한국군과 미군은 키 리졸브 훈련 등 여러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그중 쌍룡 훈련은 23년 만에 한반도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이다. 이 훈련에 한국과 미국의 해병 1만 명이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중 3천여 명을 한국으로 순환 배치하리란 얘기도 나온다.

이를 두고 태평양 지역 미군 사령관 지명자 새뮤얼 라클리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예로 들어 “한국군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미 양국군은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만큼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위안화 절상 등 중국의 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필요도 커졌다.

그러나 중동 패권을 유지하며 중동 석유를 통제하는 것이 여전히 미국 대외 전략의 핵심이다. 경제 위기로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게 하면서, 대중국 봉쇄 전략에서 일본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해 왔다.

그리고 미일 동맹을 중심에 놓고, 한국도 그 하위 파트너로 더 깊숙이 편입시키려 한다. 이런 전략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2010년 7월 한미 연합 훈련 때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에 모인 한미일 장교들. 세 국가 간 군사 협력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 등이 배치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 7월 한미 합동 해상 훈련에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참가하는 등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군사비밀 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협력도 진행 중이다.

물론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움직임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급속도로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보며 곤혹스러워 하는 면도 있다. 브레진스키*는 한국이 앞으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미국 지배자들의 시각에서 미국의 패권 전략에 대해 미 정부 관료들에게 조언해 온 외교 전문가다. 지미 카터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고, 〈제국의 선택〉, 〈거대한 체스판〉 등의 책을 썼다.

로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받아들여 중국에 더 기대는 방안과 역사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 사이에서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지배자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일본과의 동맹을 중시하지만, 최대 교역국이자 새롭게 떠오르는 강국인 중국과 불편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지배자들 일부에서는 이른바 ‘연미화중(聯美和中)’, 즉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대외 전략의 기본에 놓은 채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

그러나 이들도 전통적 한미동맹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앞세웠던 노무현 정부도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해 미국의 전쟁 수행을 도왔다.

제국주의 열강들과 역내 국가들 간의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동아시아 정세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위기로 각국 정부들이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비만큼은 지난해 14퍼센트 증가했다. 한국 군비 증강 속도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다. 이는 지배자들이 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동아시아 열강들 중에 어느 한쪽 편에 서거나 양쪽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위기와 불안정을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한국이 군사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자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의 군비 증강도 러시아, 중국 등 주변 열강들의 군비 증강과 더불어 불안정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제국주의 질서와 이를 위한 정책에 맞서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한미 연합 훈련, 핵안보 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한다. 8조 원이 넘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등 군비 증강을 멈추고, 그 돈을 복지

김영익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 출범하다

2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하 대항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반핵 여론에 부담을 느껴 G20 정상회의 때와 달리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참가했다.

미국 등은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핵무기나 북한, 이란 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회의가 사실상 북한과 이란 등 미국이 지목한 ‘불량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숨길 수는 없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각종 인터뷰에서 3월 말 서

울에서 열릴 이번 회의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 고 밝힌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초대형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많은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독점 국가들의 대북 압박 시도와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또, 대항행동의 기조 중 하나로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구호를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대항행동 내 일부 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형식적인 이유로 핵안보정상회의의 제국주의

적 성격을 못 본 체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핵심 의제로 ‘핵테러 예방’을 내세우고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표현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쑈대발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쑈대발로 만들어 버린 미국 정부는 스스로 핵테러와 테러 수단을 제공하는 ‘국가’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 압박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

시아 등이 참가하는 회의이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핵무기 독점과 약소국 억압·침공에서는 다르지 않은 행보를 취해 왔다는 것을 봐야 한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무력시위와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이 열강들의 패권 다름이야말로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대항행동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핵발전 확대를 부추길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대중행동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장호중

중국

지배자들의 내분 속에 저항이 성장하고 있다

보통 때 중국의 주류 정치는 ‘공산당 당원’이라 불리는 ‘돈에 환장한’ 지도자들의 자화자찬 외엔 별게 없다.

그러나 지난주는 달랐다. 중국의 대표적 스타 정치인인 충칭 공산당 서기장 보시라이의 ‘오른팔’ 충칭 부시장 왕리준이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갔다. 그는 수백 명의 무장 경관을 대동한 충칭 시장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은 올해 최고위 지도부 물갈이를 앞두고 공산당 지배자들 내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관련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 소동은 앞으로 발생할 더 큰 갈등의 서막일 수 있다.

중국의 2011년 마지막 분기 성장률은 8.9퍼센트였다. 평균 10퍼센트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던 나라에서는 불안한 조짐이다.

지방 정부들은 크게 늘어난 부채를 갚을 형편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도 냉각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대상인 유로존이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경제 불안정이 마지막으로 겹쳤던 시기가 1988년이었고 그것이 1989년 톈안먼 항쟁을 촉발하는 계기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급진화 과정 — 경제 위기가 각국 지배자들의 내분을 악화시키면서 기층 반란을 강화하는 것 — 이 중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실 공산당 지배자들은 꽤 오랫동안 시장 개혁이 낳은 모순 때문에 민중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을 의식해 왔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민중 투쟁을 겪으면서 탄압만으로는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 양보를 했다.

예컨대, 2005년 중앙 정부는 농촌 불안정의 중요한 원인인 농업세 징수를 중단했다. 농촌에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을 제도입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2003년에는 10년 가까이 진행된 파괴적 국영기업 민영화 물결이 일단락됐다.

광둥성 정부는 수출 공업 단지의 최저 임금을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노사 단체협상과 노동자 경영 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충칭



지난 1월 중국 선전시에서 도로를 점거한 파업 노동자들 중국 노동계급이 새로운 대안을 건설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 보시라이는 야심찬 공공주택 사업을 벌이고 호구제 개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30여 년 동안 시장 개혁이 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오히려, 지방 정부들은 줄어든 농업세 수입을 벌충하려고 경작지 토지 매각을 가속화했다. 덕분에 수많은 농민이 빈번한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광둥성에서는 임금에 인상되는 동시에 노동강도도 강해졌고 높은 물가인상을 때문에 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 충칭은 민공의 저임금 문제는 손대지 않았다. 복지 비용 확대도 국유 토지 가격의 급격한 성장이라는 지속되기 힘든 시장 상황에 의존한다.

또, 광둥성이든 충칭이든 노동자와 농민들이 민주적 조직을 건설할 권리를 억압하는 독재란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쟁하는 ‘광둥 모델’과 ‘충칭 모델’이란 것은 사실 시장 의존적이고 기층의 자주적 활동을 억누른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양보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중국 지배자들이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을 벌이고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양보 제스처

그러나 지배자들의 양보 제스처는 의도치 않게 저항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많은 노동자와 민중이 지배자들의 개혁 약속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쟁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군 광둥성 우칸 투쟁도 출발점은 중앙과 성 정부가 자신들을 지지할 거라는 기대였다. 우칸 주민들은 지방 정부들이 토지 강제 매각에 의존해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관행에 도전했다.

힘으로만 보면 주민 1만 3천 명이 중국에서 가장 막강한 지방 정부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우칸 주

민들은 빼앗긴 토지를 확실히 되찾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중국에서 다른 사회 집단의 연대가 필요한 것은 우칸의 농민들만이 아니다. 예컨대 억압받는 티베트 소수민족들은 연대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 정부의 점령 정책으로 한족의 대량 이주가 진행되면서 티베트와 신장의 소수민족은 심지어 소수민족 자치지구에서조차 다수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소수민족은 자신만의 힘으로 중국 점령자를 물리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포르투갈 혁명과 모잠비크 독립 간 관계나 1998년 인도네시아 민중 항쟁과 동티모르 독립 간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반식민지 운동은 식민 본국에서 대규모 투쟁이 발생해 사회의 세력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티베트인들이 진정한 자치를 선택하든 독립을 선택하든, 중국 내 기층 투쟁으로 현 공산당 국가가 해체되거나 약화됐을 때만 티베트인들이 민족자결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오늘날 중국에는 현존 체제에 반대하면서 다른 억압받는 집단에 강력한 연대를 제공할 잠재적 힘을 가진 집단 — 노동계급 — 이 존재한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

중국 관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혼다 부품 공장 파업과 기타 연쇄 파업으로 뜨거웠던 2010년과 비교하더라도 2011년에 발생한 파업들은 좀더 잘 조직됐고, 기업주나 정부와의 충돌을 덜 두려워했고, 한 곳의 파업이 승리하면 다른 곳의 ‘모방 파업’을 낳는 경향도 더 강했다.

게다가, 이것은 비교적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민공 투쟁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2012년 1월 쓰촨 성 청두에서는 중앙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국영 철강 기업 노동자들이 3일 동안 파업을 벌여 임금 인상을 따냈다.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엘리트’ 집단으로 여겨지는 중앙 정부 직속 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은 경기가 하락하면서 자신의 생활수준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노동자 투쟁의 상승세를 볼 때, 경기 하락은 일부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지만 많은 노동자가 분노를 더 날카롭게 표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변수는 현재 중국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다. 물론 중국 지배자들의 호주머니에는 아직 돈이 있다. 그러나 이 주머니는 지방 정부들의 악성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줄줄 쏠 것이다. 그러면 경기 부양에 쓸 돈이 얼마나 남을까?

중국 자본주의를 계속 성장시킬 명쾌한 해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중국 지배자들은 자기들끼리 다툼을 최소화하면서 기층의 불만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중국 노동자, 농민, 소수민족 등이 공산당과 기업가들의 독재에서 벗어나 독자적 대안을 건설할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세계사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김용욱

티베트인의 목소리

중국 정부는 학살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며 티베트 음식점을 운영하는 네팔 국적의 망명 티베트인 민수(텐징 뽈렉)입니다. 저와 티베트의 모든 이야기를 이곳에 전한다는 것이 부족하겠지만, 지금 티베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연대라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지난해 티베트 민중봉기 기념일(3월 10일)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1년 동안 스님 스무 명이 분신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2월 12일) 십대 여승이 또 분신을 시도했고 생사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한 국제적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중국 정부는 무력 침공으로 1951년 5월 23일 티베트 정부와 ‘티베트의 평화적 해방에 대한 협정’(일명 ‘17조 협약’, 한국의 을사조약과 같음)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에는 티베트의 자치권 보장, 종교적 자유 인정 등을 담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약

속을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티베트에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1959년 한 해에만 티베트인 4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셀 수 없는 죽음과 끔찍한 고문과 학살이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티베트의 사원 6천2백 곳 중 지금 남은 곳은 13곳밖에 안 됩니다.

분신

티베트 승려들에게 달라이 라마를 부정하고, 욕하고, 침을 뱉으라며 환속을 강요했습니다. 언어 말살과 문화 말살, 역사 왜곡 등 수많은 모욕과 탄압의 60년 세월 속에서도 우리 티베트인들은 한 번도 중국을 향해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방법론에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중국을 향해 총을 들고, 무력으로 맞서는 것은 더 많은 죽음만 부를 것입니다.

지금 티베트에는 티베트인들이 5백 40만 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폭압에 많은 티베트인들이 고국을 버리고 타국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국 BBC는 티베트인 형제가 티베트의 평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고 중국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을 불사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티베트가 처한 현실입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평화와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분열주의자로 매도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말합니다. 티베트를 위해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 분열해야 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수십만 명을 죽이고, 세계에서 유일한 티베트 불교를 말살시키려 하고,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력만을 내세우는 중국 정부는 학살자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분열시키자고 주장하



지난 2월 8일 티베트 학살에 항의하는 연대 집회에서 발언하는 민수 씨

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에 평화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치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 티베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티베트입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티베트인입니다.

민수 텐징 뽈렉

티베트에서 벌어진 학대와 분신, 티베트인의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

등록금 — 조삼모사식 쥐꼬리 인하

대폭 인하를 위한 행동을 건설하자

가슴 설레는 구호인 ‘반값 등록금’이 서울시립대에서 실현됐다. 그동안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등록금 인하’도 대세가 됐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대학생들과 사회운동이 투쟁으로 일군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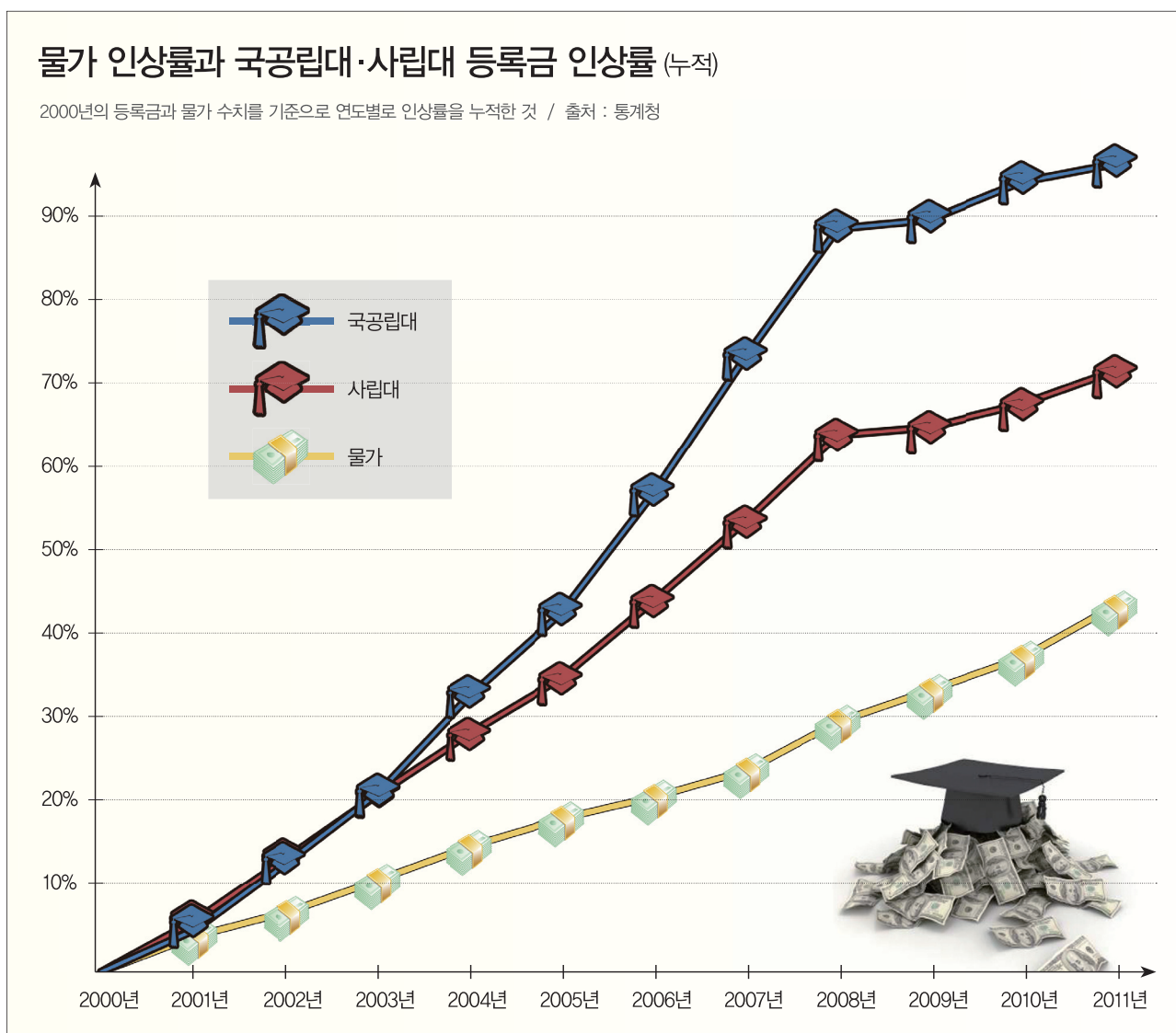
그러나 올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현재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들은 등록금을 고작 2~3퍼센트 인하했을 뿐이다. 여전히 대학생과 학부모 들은 등록금 1천만 원에 허덕인다. ‘대학 등록금이 지금 수준에서 최소 12.5퍼센트 인하가 가능하다’는 지난해 대학 감사 결과가 무색해진다.

그동안 대학들은 물가인상률의 두세 배를 넘어서 등록금을 올려 왔다. 뿔뿔이 예산, 입학금 대폭 인상 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며 사립대들이 쌓아 둔 돈이 무려 10조 원이다. 올해 고려대학교 입학금이 서울시립대 인문계 학생들의 등록금보다 비싸다!

그러면서 대학들은 이번 소폭 인하에 얕은 소리를 한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하를 명분으로 수업 일수를 줄이거나, 시간 강사를 자르거나, 강의 과목을 축소했다. 연세대는 학생들에게 줬던 장학금을 빼앗으려 해 빈축을 샀다.

등록금을 ‘절감’ 인하한 것조차 학생과 학내 구성원들에게 고통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다. 학생들을 우롱하는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정부도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반값 등록금 운동의 압력으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약간 늘렸다. 그러나 정부가 과장한 것과 달리, 애초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위해 배정해 놓은 돈에 고작 3천3백23억 원을 증액했을 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인 반값 등록금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률의 2~3배나 오른 등록금 학생과 노동자 등의 등골을 휘게 만든 살인적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은커녕,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이 명목 등록금을 30퍼센트 인하하겠다고 내놓은 안보다 한참 후퇴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라며 올해

도입한 국가장학금도 문제투성이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자료를 보면, 장학금 수혜자를 평점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해서 실제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액수도 너무 적다. 기초수급자에게

1년에 4백50만 원을 준다는데, 1인당 교육비가 2천만~3천만 원씩 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조차 신청 기간을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

학생 약 5만 명이 대부업체에 빚 8백여 원을 진 것이 드러났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도 3만 명이 넘어섰다. 대학생들은 사회 첫 발을 닫기도 전에 빚을 지고 있다.

신용불량자

대학과 정부는 적립금을 풀고,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서 실제 고지서상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서 그리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올해 고려대, 성대, 연대, 한국외대 등의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 대표자들이 생색내기 등록금 소폭 인하를 합의한 것은 문제다. 이는 이후 추가 인하를 위해 학생들이 투쟁할 명분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불만과 고통을 전혀 대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학생 대표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학생들 전체가 동의하고 합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대학에서 진보적 학생들은 기층의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개인들을 모아서 투쟁 기구를 건설하고 학생들의 불만을 모아서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경제 위기 시기고, 여러 대학이 2~3퍼센트 인하를 담합했기 때문에 대학 당국이 쉽게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실질적 양보를 얻어내려면 점거와 같은 전투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학교 당국에 맞선 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정부에 맞선 투쟁에도 참가해야 한다.

이런 투쟁이 성장할 때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지현

교육재정 확충하고 기성회비 폐지하라

2월 4일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주최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1월 27일 청구소송이 1차 승소한 것에 힘입어, 한대련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의 총학생회와 기성회비 청구 운동본부도 대거 참가했다. 국공립대학 21곳의 대표자들이 모여, 운동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논의했다.

대표자들은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는 것을 기성회비 반환 운동의 목표로 정했다. 더불어 정부가 국

공립대학을 분명히 책임지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부 참가자들은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폐지됐을 때 국공립대 재정이 파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우려는 이 운동이 단지 기성회비 폐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성회비 액수만큼 국가의 재정지원이 늘어야 한다.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도 훨씬 못 미친다. 정부의 국공립대 지원을 대폭 늘려 교육조건 후퇴 없이 기성회비를 폐지시켜야 한다.

학교 당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성회 직원들 구조조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성회가 고용한 노동자들은 사실상 대학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이 노동자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무원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1심 승소 뒤, 교과부는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문제의 책임을 정부나 대학 당국이 아닌 기성회로 국한시키려 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재정회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그러나 재정회계법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게다가 재정회계법은 국공립대 법 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의 일부다.

기성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전체 반값 등록금 운동의 일부라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백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야 기성회비 문제가 법원에서

지적된 것 자체가 반값 등록금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인화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교과부에도 맞서야 한다.

1차 소송 승리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기층의 요구를 반영한다. 곧 발족될 전국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운동본부는 소송운동을 넘어서 아래로부터의 분노를 투쟁으로 분출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정현호 서울시립대 학생

비키니 응원에 대한 나꼼수의 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이번 사건을 빌미로 안 그래도 이명박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눈엍가시로 여기던 보수 언론과 우파들이 나꼼수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권 옹호 방선으로 전략해 대중의 지탄을 받는 MBC가 한 여성 기자의 비키니 사진을 문제 삼아 경위서를 요구한 것에도 반대한다. 그들의 목적은 이명박 비판에 흠집을 내는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나꼼수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 조중동 웹사이트에 한 번만 가 보라. 여성의 벗은 사진과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와 기사들이 널려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성적 보수주의를 설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 상품화의 첨병

노릇을 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필요를 위해 여성 억압을 합리화하는 장본인이다. 여성의 낙태권,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반대하는 집단이다.

그럼에도 나꼼수를 방어할 순 없다. 여성 정치자들을 정봉주 씨의 성욕을 돋우는 대상으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꼼수에 대한 비판이 불거진 후에도 김어준 씨는 비키니 응원 여성을 두고 ‘성물학적 완성도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데, 이것은 그가 여성을 몸매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나꼼수에 대한 비판을 성적 업숙주의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과 성 개방적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명백한 여성차별적 태도다.

성적 대상화

나꼼수가 비키니 여성 뒤에 숨으려 하는 것도 비겁하다. 나꼼수 처지에선 ‘우리를 응원한 그 여성을 욕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키니 여성을 방어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여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

나꼼수는 “비키니 발언이 성희롱이 되려면 권력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청취자와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물론, 나꼼수가 여성 억압에서 이익을 얻고 여성 억압을 낳는 우리 사회의 권력자는 아니다. 그러나 노동계급이나 진보진영 내 사람들도 여성차별적 편견에 찬 언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분위기에 도전해야만 단결이 가능하다. 같은 진보진영 안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 어떻게 동지 의식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한편, 비키니 사진을 올린 여성들은 부당하게 수감 생활을 하는 정봉주 씨를 응원하고 싶은 정당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썩어난 몸매를 드러내는 것이 곧 여성의 자부심인 양 여겨지는 여성차별적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이

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슬럿워크(‘여성의 아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캐나다 경찰관의 발언에 항의해 ‘무슨 옷을 입든 성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하는 뜻으로 벌인 시위) 등과 이번 시위는 다르다. 정봉주 응원 사진들은 썩어진 몸매를 드러내 눈길을 끄는 방식이었다면, 슬럿워크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항의하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비키니 여성의 응원 자체보다는 그것을 정봉주 씨의 성욕을 돋우는 수단쯤으로 치부하고, 여성의 가슴 크기를 품평한 나꼼수의 태도가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최미진

복지국가 논쟁

비그포르스 제대로 보기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진보 진영 내에서 스웨덴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비그포르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난다. 얼마 전에는 홍기빈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책세상)도 출판됐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는 “스웨덴 사민주의 운동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이데올로그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 당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했다.”(신정완, ‘비그포르스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비그포르스는 1920~40년대에 재무부장관 등을 역임하며 사민당 내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는데 당시에 “사민당이 제출한 급진적 경제 정책 구상의 배후에는 늘 그가 자리잡고 있었다.” 1928년의 상속세 강화안이나,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1946년의 조세개혁안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급진적 정책들은 대부분 자본가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비그포르스는 부르주아 정당들이나 재계로부터, 사민당 지도부 내에 자리잡은 골수 사회주의자로 간주돼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 되곤 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논자들은 비그포르스의 주장을 소개하며 뜬금없이 급진적 반자본주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복지국가소사이터터 정승일 정책위원은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를 서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들[반자본주의자들]은 여전히 ‘생산수단의 사회화 또는 국유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비슷한 수준의 공상적 유토피아주의로 전락했다.”

그러나 비그포르스의 정신을 따르자며 ‘생산수단의 사회화 또는 국유화’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비그포르스는 1940~50년대에 스웨덴 사민당 지도자들에게 복지국가에 안주하지 말고 ‘생산수단의 사회화 혹은 국유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한 좌파 개혁주의자였다.

국유화

비그포르스 이전에 스웨덴 사민당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닐스 칼레비(1892~1926)가 있는데 칼레비는 일찌감치 사민당에 국유화 노선을 포기하도록 촉구했다.

1960년대 말까지 스웨덴 사민당이 추진한 정책들은 대부분 이런 칼레비의 노선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그포르스의 견해는 달랐다. 특히 말년에 비그포르스는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힘을 쏟았는데 1959년에 쓴 《정체 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가? 일상 정치와 유토피아》에 그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그는 복지국가가 전성기를 누리던 1950년대 스웨덴에서 사민주의 운동의 핵심 과제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극복을 제시했다. 다양한 개혁 정책으로 스웨덴 사회의 민주화와 평등화가 꾸준히 진행됐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위 상의 큰 격차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요지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정책(복지정책) 등으로는 불충분하고 기업 소유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그포르스가 1958년에 쓴 《잠정적 유토피아에 관하여》는 옛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스탈린 집권 시절의 끔찍한 실상이 드러난 때에 칼 포퍼 등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에 응답한 글이다.

비록 이 책에서 비그포르스는 칼 포퍼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끝까지 유토피아(사회주의)라는 목표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토피아의 청사진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고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평등주의적 사고가 없었더라면 복지국가는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평등주의적 사고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복지국가 내에도 아직 남아 있는 계급사회의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그포르스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예컨대 그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체제 변화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했다.

비그포르스가 제안한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 구상은 훗날 마이르너가 ‘임노동자기금’안으로 발전시켰다. 마이르너는 한 인터뷰에서 임노동자기금이 칼레비와 사민당 주류의 노선과 달리 마르크스와 비그포르스의 전통을 복원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1975년 사민당과 LO(스웨덴 노동총)가 내놓은 임노동자기금안은 대기업들이 해마다 이윤의 20퍼센트를(!) 기여금으로 납부해 임노동자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윤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내야 하고, 현금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납부한다. 이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임노동자기금의 소유 지분으로 동결된다.

또, 개인의 자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배당도 하지 않는다. 기금은 오로지 LO가 집단적으로 소유·관리한다.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기업의 대주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비그포르스의 생각대로라면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길이 열리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무



사진 출처: dinesaphon (flickr.com)

복지 식감에 반대하는 영국 노동자들 복지국가가 부딪힐 시장 논리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반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하다.

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하는 ‘사회주의’로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상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었다. 임노동자기금이 개별 기업들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경제 전체는 여전히 국내의 시장 경쟁에 종속돼 있다는 사실이다.

임노동자기금

결국 해당 기업의 자본가들이 받던 시장의 압력을 임노동자기금을 운영하게 될 노동조합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비그포르스의 구상은 이런 시험대에 오르지도 못했다. 자본가들의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으로 사민당은 이듬해에 44년에 걸친 장기집권을 마쳤다.

사민당과 LO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가 이전처럼 단단한 것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940년대 말부터 강력한 임금 억제 정책을 펼친 사민당 정부와 LO 지도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결국 1960년대 말에는 유럽 전체의 좌경화 분위기를 타고 스웨덴 곳곳에서 비공인 파업들이 벌어졌고 LO 지도자들의 통제력은 크게 약해졌다. 자본가들은 이런 LO와의 단일 상층 교섭 구조를 견어차 버렸다. 스웨덴 ‘모델’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민당이 임노동자기금 같은 급진적 정책을 시도한 것은 이런 급진화 분위기가 덕분이었다. 문제는 사민당 우파는 물론이고 당내 좌파조차 이런 노동자 투쟁의 힘을 활용해 자본가들을 밀어붙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민당에 불만을 느낀 노동자들을 조직할 대안적 좌파 정당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1970년대 경제 위기는 사민당 내 좌파 지도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사민당은

1982년 말에 재집권하자마자 스웨덴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제3의 길’ 정책을 추진했다.

그 뒤로 스웨덴 복지국가는 사민당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한국 같은 나라에 견주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이전보다 크게 악화됐다.

사민당은 1996~2006년 사이에만 당원의 3분의 1을 잃었고, 2006년에 이어 2010년에도 보수당에 크게 패배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제시하는 진보진영이 비그포르스의 주장과 실천에서 이끌어내야 할 진정한 교훈은 반자본주의적 급진성과 거리두기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 시기에 복지국가를 건설·유지하려 하는 운동은 곧 시장 논리라는 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벽을 뛰어넘으려면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비그포르스의 결정적인 약점은 그 벽을 살짝 넘어갈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 데 있다. 마이르너는 기업을 돈으로 사들여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인 자본가들의 공포와, 거기서 비롯한 격렬한 저항을 물리치려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투자가 아니라) 투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계급투쟁의 이론인 마르크스주의가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대목이다.

장호중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쟁점

오늘의 위기와 저항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미국 '절거하라' 운동의 의의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

계속되는 이집트 혁명

카다피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2)

금융화와 오늘의 세계경제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대담: 오늘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1. 마르크스의 경제위기론과 그에 대한 비판

서평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한국 노동계급은 쇠퇴했는가?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문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Paul Reynolds (flickr.com)

포르투갈

IMF에 맞선 30만 시위

포르투갈에서 조제 비에른 보이드 페르페이트루

2월 11일 포르투갈에서 3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를 메웠다. 이 시위는 포르투갈에서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시위 중 최대 규모다.

시위대는 IMF가 포르투갈에 강요한 악랄한 긴축안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포르투갈의 공식 실업자 수는 약 70만 명이다.

열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실업자라는 말이다. 우리는 더 깊은 빈곤의 나락에 빠지고 싶지 않다. 복지국가 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지금 우파 정부는 우리가 그나마 가진 보잘것없는 혜택조차 삭감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주는 음식으로 연명한다. 아이들은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학교 급식에 의존한다.

포르투갈은 저임금 국가다. 최저임금은 월 4백85유로(약 54만 4천 원)이고 경제활동인구 70퍼센트의 소득은 월 6백 유로(약 67만 3천 원) 미만이다.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임금과 비용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 포르투갈 정부는 은행들과 민영화된 옛 국영기업들을 구제하느라 정

신이 없다.

시위대는 그리스 민중에게 연대를 보내는 배너를 들고 행진했다. 이 시위는 포르투갈 민중의 반란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것을 보여 줬다.

» 관련 기사 3면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90호

번역 최용찬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3·8 여성 비정규직 공동 투쟁에 함께하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작업장 6곳(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홍익대, 경희대)의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조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집단교섭이 지난 2월 7일에 최종 결렬되면서 단체행동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해에 집단교섭과 파업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따내며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선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공공운수노조가 3·8 여성의 날을 기점 삼아 다른 부문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여성 비정규직 공동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은 이번 집단교섭에서 ‘생활임금(시급 5천4백10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홍익대는 “근검절약하는 학교라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악 임금’을 주는 용역업체와 적립금 수천억 원을 쌓고도 원정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자 사학재단들의 행태는 ‘근검절약과는 정반대다. 오히려 사학재단들은 99퍼센트를 쥐어짜는 탐욕스러운 1퍼센트의 일부다.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이 인하됐으니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며 학생과 노동자를 대립시키는 논리도 어김없이 꺼내 들었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과 학생 등록금은 어느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는 관계가 아니다. 예컨대 이화여대 재단이 쌓아둔 6천5백억 원이 넘는 적립금



“등록금은 내리고 임금은 올려라” 지난해 3월 고려대에서 열린 대학 청소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 집회

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임금 인상과 등록금 인하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공동의 적인 학교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등록금은 내리고 임금은 올려라”는 구호 아래 노동자와 학생의 감동적인 연대 투쟁을 만들어내자. 지난해에도 학교가 더러워지고 수업시간에 집회가 매일같이 열려도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경희대와 고려대 당국은 교섭 과정에서 ‘시급 5천 원’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파업으로 쟁취한 4천6백 원보다는 높지만 생활임금에는 못 미친다. 지난해 보건

복지부가 발표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백44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게다가 홍익대 당국은 지난해보다 겨우 1백 원 오른 4천7백 원을 제시했을 뿐이다.

단호하게

따라서 투쟁이 필요하다. **전연 파업과 점거 등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서야만, 10퍼센트 안팎의 임금 인상을 따낸 지난해처럼 승리할 수 있다.**

이화대, 연세대, 홍익대 등은 복수노조법을 악용해 친 사측 노조를 앞세워 기존 노조를 탄압하려 한다. 이러한 사측의 공격과 악법을 분쇄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분회가 집단교섭은 했으나, 정작 교섭이 결렬되고 나서는 세 대학 공동파업 전술을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않아 초반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공동 파업에 돌입해 학교 당국들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시한부 파업이나 ‘태업’ 등 모호한 전술에서 무기한 파업으로 가장 먼저 전환하고 본관을 점거했던 이화여대 분회가 가장 먼저 임금 인상의 성과를 따냈다.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위기 속에 허우적거리는 지금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기 좋을 때다. 그리고

몇 년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 투쟁이 성과를 거두면 다른 부문 노동자의 임금 인상 투쟁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부터 이 움직임에 연대하면서 6월까지 이어질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청소 노동자 투쟁에 충분히 뛰어들지 않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투쟁의 디딤돌을 놓쳤다. 이번 투쟁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이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하반기 정치 파업도 제대로 건설될 수 없을 것이다.

진보정당들도 이 투쟁에 실질적인 연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선거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대중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을 때다. 청소 노동자 투쟁이 승리한다면 노동계급의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고, 이것은 다가올 선거에서도 진보 정당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유령처럼 일하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지난 4년간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만약 이번 투쟁이 승리한다면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최악의 레임덕으로 쓰러져가는 정부에 타격이 될 것이다.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김승주

보육교사

쥐꼬리만 한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분노의 폭발

심선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 부부장

보육교사 임금 동결 반대 집회를 앞두고 임금 동결에 분노한 한 보육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리고 “저는 월차를 사용할 수 없어 못 가니 꼭 이 팻말(“보육교사 파업하면 대한민국 All Stop!”)을 들어 주세요”라며 울먹였다. 그는 우리가 하루 파업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마비되고 일주일 파업하면 모든 것이 멈출 거라 했다.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정부는 보육교사들이 천사와 같길 바라면서도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으로 방치하며, 헌신만을 요구했다.

열악한 노동조건만이 아니다. 아동 폭행 사건이 터지면 모두 범죄자로 취급받고,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하면 해고된다. 부모들의 불만이 들어오면 이유 불문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분노를 낳았고 드디어 그것이 폭발했다.



“우리가 씹다 버려진 껌이냐. 더는 참을 수 없다.” 2월 8일 보육교사 임금 동결 반대 집회

집회에서 17년간 현장에서 일한 보육교사가 “우리는 씹다 버려진 껌이나 다름없다. 무엇을 더 참아야 하나며 그동안 겪은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이야기할 때, 모인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한 남자 보육교사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을 갈 돈이 당좌 나오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할 때, 터져 나온 웃음 뒤

에는 더욱 큰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내 아들이 졸업식에도 한 번 가 보지 못한 엄마의 속사정,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가도 달려가지 못한 딸의 이야기. ‘교사들이 사람임을 잊었는가!’ 하는 절규가 담긴 글들이 집회 후에 남았다.

사실, 국공립 보육교사의 임금이 나오는 구조 자체가 큰 문제다. 기본 임금은

턱없이 적은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사정, 일시적인 정책에 따라 수당이 들쭉날쭉한다. 이렇듯 보육 노동자의 임금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어 먹어야 하는 거지 밥그릇 같다. 저들은 어느 날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수당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다.

거지 밥그릇

그나마 국공립어린이집의 노동자들은 형편이 낫다. 사립어린이집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것조차 주기 힘들다는 원장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육료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원장들의 집회에 동원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

집회가 끝나고 뒤풀이에 참가한 5년 차 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이전에는 길바닥에 앉아서 ‘투쟁! 투쟁!’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조차 알기 싫었고 심지어 불편함에 화도 냈지만, 오늘 자신이 그 차디찬 길바닥에 앉았고 그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집회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수당을 더욱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저들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수당이 아닌 임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하는 보육 노동자들의 소리를 묵살한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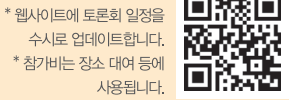
노동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한 항의 전화와 온라인 시위를 이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평일에는 집회에 참가할 수 없는 보육 노동자들을 위해 주말인 2월 25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금 동결을 규탄하고 8시간 노동이 가능한 2교대제를 주장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보육 노동자 지자체 직접 고용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임을 알릴 것이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보육 노동자들의 분노와 열망을 제대로 담은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토론회
세계를 뒤흔든 1년 —
아랍의 혁명적 상황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연사 : 김문성 (레프트21) 기자
일시 : 2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3층 (충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 02-324-3400

다함께 경기 남부 공개 토론회
탈출구를 잃어버린 유럽 경제 위기 —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 : 이정구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 2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수원세무서 방향 도보 5분 매산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2천 원 (대학생 : 청소년 1천 원)
문의 : 010-4149-1968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토론회
[104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여성은 왜 차별받고,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연사 :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일시 : 2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출구)
참가비 :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 010-8877-5533, 010-9453-5318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3 3층 303호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2월 27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전북버스

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전북버스 노동자들

지난해 무려 1백46일 동안 파업을 벌여 민주노조를 인정받은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다시금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투쟁 속에서 건설된 민주버스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전주시내에선 이미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조직력을 가지게 됐다. 한국노총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붕괴했다. 따라서 파업이 벌어지면 지난번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강력한 준법투쟁을 해 이미 지난해 10월까지 두 달여 동안 무려 2만 건이나 운행에 차질을 빚으며 사측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렇게 해서 버티기로 일관하던 사측을 임금단체협상에 나오게 만들었다.

그러나 교섭은 사주들의 버티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과 없이 무려 석 달을 끌었다.

다가오는 4월이면 총선 등 정치적 압력을 높일 수 있어 투쟁에 돌입할 최적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4월부터는 개정노동법의 교섭권 단일화 조항 때문에 지부의 일부가 교섭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최근 전북지부 투쟁본부는 만장일치로 2월 말, 늦어도 3월 초 파업을 비롯한 투쟁에 돌입해 임단협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했다. 투사들을 현장 실천단으로 조직하고 조합원들의 결의를 끌어내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그리고 올바르게도 전북고속 투쟁에 책임 있게 연대하기로 결의했다.

전북고속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더 일찍 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조직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전북지부는 한마디로 '분회는 강력하지만 지부(산별)는 허약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4백30일을 넘긴 전북고속 조



버스노동자 파업 승리 결의대회

합원들은 어떤 신본 보장도 없이 먼저 복귀하라고만 하며 조직을 깨는 데 혈안인 사측과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 했다.

전북지부는 보복성 임금 삭감과 강등 조치, 그리고 심지어 해고 시도까지 자행하는 호남고속(사주들의 연합을 이끄는 지역의 대표적 토호)에 맞선 공동투쟁도 벌이지 못했다.

힘들게 마련한 지부 임단협이 개별 사업장 문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북지부의 일부 지도부가 우려해서 였는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대안 없는 태도였다. 결과는 사측에 끌려다니기, 사기저하, 그리고 혼란과 내분이었다.

이를 돌아보면서, 조합원들은 민주노조 사수와 임단협 정취를 위한 강력한 연대와 임단투 파업 투쟁의 시동을 힘차게 걸어야 한다.

이병무

세종호텔

파업 38일 만에 얻은 성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파업 38일 만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협약 준수 등을 약속받았다. 용역회사까지 설립해 외주화를 추진하려던 사측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함께한 투쟁은 고무적이었다.

한국노총 소속으로 쟁의 한 번 해보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옮겨서 처음으로 한 달 넘게 투쟁해 스스로 쟁취한 것도 의미있다.

물론, 투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부당 전보를 막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다. 노조 지도부가 투쟁 수위를 높이길 주저하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성과는 정부·여당이 더한층 깊은 위기로 빠져들고, MBC 파업, 쌍용차 투쟁,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등 저항의 가능성이 꿈틀거리는 속에서 이뤄졌다. 정치적 상황이 세종호텔 투쟁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세종호텔 투쟁은 1월 17일 사측이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하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1월 30일 '희망두벽이' 집회를 앞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적 지지도 넓혀졌다.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이 MB의 측근이라는 점도 주요했다. 노조는 “우리로 MB맨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파업 중인 MBC 노동자들과 홍보전을 함께하고, KTX 민영화 반대 집회에 대열을 지어 참가했다.



1월 30일 '희망두벽이'와 함께한 세종호텔 집회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을 비롯해 홍세화·노회찬 등 진보 인사들이 농성장을 찾았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까지 지지 방문을 왔다.

결국 사측은 '희망두벽이'가 주최하는 2차 세종호텔 집회를 하루 앞둔 2월 6일 밤, 한발 양보했다.

MB의 측근

세종호텔 노조가 그동안 정치적 투쟁들에 연대해 온 것이 이번에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노조는 2008년 촛불집회 때부터 최근 한미FTA 저지 투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투쟁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왔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투쟁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 더 빨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박설

독자토론광장

2월 27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Letter@left21.com

내부만 보면서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돼

지난호 <레프트21>에 실린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사에서 박성환 씨는 통합진보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이는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진보의 존재감을 스스로 갉아먹은”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통합진보당 내부의 역학 관계를 보면, 계급적 기반이 상이한 정치 세력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때문에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이 위기라고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은 최근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통합 직후보다 비교적 낮은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서구보다 국가 탄압 수준이 높고 진보정당 활동에 온갖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3~4퍼센트의 지지를 얻는 것을 낮다고 폄하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게다가 3~4퍼센트의 지지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얼마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친노 세력이 민주통합당 지도자들로 부상하고 그들이 '좌클락'하면서 일시적으로 진보정당의 입지가 좁아진 탓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 <한겨레> 2월 14일치 기사를 보면,

2040세대 중 “나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77.7퍼센트나 됐다. 이는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40퍼센트가 민주통합당에, 17.3퍼센트가 통합진보당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합진보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새누리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16.7퍼센트)보다도 높았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될 곳을 밀어주자”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음에도, 통합진보당이 약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대선에서 68.1퍼센트가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분배를 중시하는 인물’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배자들의 고통전가로부터 자신의 삶을 방어하고픈 대중의 열망이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바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삶을 방어하고픈 대중의 열망 덕분에 부상하곤 했다. 이런 조건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위기 속에서도 약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한편, 박성환 씨는 “상당수 사람들이 친노 세력이 부상한 민주통합당과 ‘노

무현(과 전태일) 정신을 계승한다’는 통합진보당이 무엇이 다른지 헛갈려 하는 판”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차별성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분석은 현실과 맞지 않다. 정치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두 당이 구별되지 않게 보일 뿐이다. 다수의 선진 노동자들과 정치적 관심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참여당과의 통합 이후에도 통합진보당이 여전히 조직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는 점 때문에 두 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여긴다.

통합진보당 내부의 역학 관계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통합진보당에 대거 입당하거나, 전여농 등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는 등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중운동 단체들의 지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봐야 한다. 2월 5일 통합진보당 총선승리전진대회에 7천 명 가량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여 준 점만 봐도 통합진보당의 위기를 과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병호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선거는 민주적으로 치러야 한다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학생위원회를 비롯해 몇몇 시당, 대학에서도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학생들과 접촉면을 늘릴 수 있도록 여러 대학에서 당원 모임, 학생위원회를 건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더욱 효과적으로 이런 모임들을 건설하려면 학생 당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남창우 총남도당 학생위원장은 당 웹사이트 게시판에서 학생위원회 선거가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남창우 위원장은 “학생위원회가 학생 당원들에게 필요한 체계라는 토론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쪽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패권을 부를 뿐”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선거가 학생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그의 문제 제기는 새겨 들을 만하다.

그러나 학생위원회 선관위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총남도당 학생위원장이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한 회의에 참석해 놓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후 회의에 불참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 답변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또, 기존 민주노동당 학생운영위와 국

민참여당 청년위원회가 토론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선거 추진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문제의 핵심을 수용하지 않는 듯하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내용을 보자면 더욱 그렇다. 기층 당원들 사이에서 학생위원회의 필요성, 활동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이 없는 채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위원회 선거 정보는 당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이 사실상 전부다. 평범한 학생 당원들은 선거 공고가 있기까지 학생위원회 건설에 관해 거의 어떤 정보도 얻기 어려웠다. 학생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일부만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남창우 위원장의 문제 제기가 있는 이후에도 여전히 학생위원회 선거는 당권자 현황 같은 중요한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적 선거 운영에 대한 공개적 제기가 있는 만큼 학생위원회 선거는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학생당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김지윤

정정합니다 74호에 실린 김기철 독자의 편지 중 둘째 문단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국방비 증액 요구”의 잘못입니다. 담당기자의 실수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독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MBC 파업과 연대로 김재철을 쫓아내자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MBC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들면서 지지는 더 커지고 있다.

파업에 연대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81개가 MBC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공동대책위도 구성하려 한다. 2월 17일에는 MBC 파업을 응원하는 대규모 콘서트도 열린다. 이런 분위기 속에 25년차 논설위원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KBS 새노조와 YTN 노조도 MBC 노조와 함께 공동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KBS 새노조는 17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그동안 KBS는 MBC보다 더한 정권 친위 방송으로 전락했다. 천안함 보도와 특집 프로그램, 원전 수주 특집 열림을 악화, 4대강 특집 프로그램과 보도, 한미 FTA 보도와 정부 광고 등이 그 사례다.

이런 친정권 방송에 맞선 KBS 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을 것이다. 또한,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함께 파업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파업한 지 두 주가 지났는데도 MBC는 여전히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협상언커녕 주요 일간지에 파업을 비난하는 광고를 싣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냈다.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접거, 농성, 시위, 임직원 출근 저지



2월 3일 열린 MBC 노조의 명동 거리 홍보전 MBC 사측의 반격이 시작된 만큼 우리 쪽도 더 강력한 연대와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등의 행위를 할 때마다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대 확산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계약직 채용 공고도 냈다. 대체인력이 투입돼 프로그램이 정상화되면 파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면 피켓팅(대체인력 투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동) 같은 더 단호한 행동도 필요하다.

이 파업이 단지 MBC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맞선 투쟁이라는 점 때문에 연대의 확산이라는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2008~09년 미디어법에 맞선 MBC 파업 때는 규모 있는 촛불집회를 여러 차례 조직해 사회적 지지를 결

집했다. 그 결과 법 통과를 두 번이나 연기시키며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이런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 지 두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연대기구가 출범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MBC 노조의 상급단체인 언론노조가

이런 일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지만, 미디어법안을 둘러싼 언론노조와 MBC 노조의 갈등이 결립돌이 되고 있다. MBC 노조도 언론노조가 지난주 개최한 언론 탄압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등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조중동 종편에 유리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이 법안이 '차악'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던 언론노조 지도부는, 법안이 통과되고 뒤늦게서야 개정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통과된 미디어법법을 이 제라도 개정하고자 한다면 MBC 파업에 대한 연대를 적극 조직해야 한다. 악법을 개정할 힘은 MBC 파업 같은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MBC 노조 역시 언론노조 등과 연대해 투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자세가 분명해야 한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등 대안 매체를 통해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MBC 사측과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정치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노총도 지금 벌어지는 MBC 파업에 실질적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이런 활동들이 결합된다면 MBC 파업은 정당한 파업일 뿐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쟁취하는 파업이 될 수 있다.

최미진

쌍용차

투쟁을 확대해 죽음의 행진을 끝내자

쌍용차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비통한 죽음을 맞이했다. 쌍용차 파업 1천 일을 하루 앞두고 전해진 소식에 안타까움을 넘어 끓어오르는 비통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2009년 쌍용차에서 2천6백46명이 해고된 후 지난 1천 일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채취업도 못해 대리운전,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다. 정부의 살인 집안이 남긴 상흔과 경제적 고통으로 노동자와 가족 스물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급휴직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재고용하겠다는 8·6 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후 쌍용차를 헐값에 인수한 마힌드라는 실적 개선을 자랑하면서 “회사의 기대만큼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2014년께나 검토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 상태는 이미 회복됐다. 자동차 판매 대수는 11만 3천 대로 2009년 전의 수준을 회복했고, 매출과 이익 규모는 2004년 수준을 회복했다. 공장 가동률은 그때보다 30퍼센트 가까이 늘었다.

쥐어짜기 경영으로 이익을 늘린 마힌드라가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다. 지금 쌍용차 공장 안 노동자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노동강도는 더 강화됐다. 항의 조차 할 수 없는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미 재직자 중 두 명이 자살했고, 한 명

은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한쪽에서는 일을 하지 못해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중한 노동으로 죽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속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비통함과 분노

정부의 해의 매각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이 이런 참상을 조장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상하이차·마힌드라에 매각한 결과로 노동자만 피해를 봤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말했듯이, “스무 명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쌍용차를 공기업화해서 노동자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희희낙락 온 더러운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쌍용차 투쟁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쌍용차 앞에서 벌어진 집중집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가 늘고 있다.

언론들도 연일 쌍용차 사태를 다루면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KTX 민영화 반대 투쟁,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MBC 파업 등 지금 준비 중이거나 벌어지는 투쟁들과 쌍용차 투쟁이 연결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4차 집중집회는 서울에서 개최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각종 투쟁들이 벌어지는 데다가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3월 25일 민중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런 투쟁들을 모아 위력적인 시위와 도심행진을 벌인다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금속노조가 총선 국면에서 노동의제를 쟁점화시키고자 3월 중순 서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그런데 일부 좌파 단체가 정치인들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계획들을 경원시하는 것은 유감이다.

투쟁을 회피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태도는 문제지만, 총선 때 높아질 정치적 관심을 활용해 투쟁을 확대하고 지배자들을 압박하려는 계획까지 문제 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금속노조의 구실이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이번에 쌍용차 투쟁을 재점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쌍용차 투쟁은 금속노조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금속노조 지도부가 연대 단체들과 협력적으로 운동을 건설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은 아쉽다. “희망텐트 연대 모임”, “희망부벽이” 등 연대 단체들도 쌍용차 투쟁의 지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한 만큼 존중하면서 연대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투쟁이 전진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을 고무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투쟁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명지



2월 11일 열린 3차 쌍용차 포위의 날 4천여 명이 모여서 연대의 힘을 보여 줬다.